



2023년도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 5.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목 차

I. 감사의 목적 .....	1
II. 감사기간 .....	1
III. 감사실시 대상기관 .....	2
IV. 감사실시 경과 .....	4
V. 감사실시 주요내용 .....	8
1. 행정안전부 .....	8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3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37
4. 인사혁신처 .....	40
5. 경찰청 .....	43
6. 소방청 .....	50
7. 지방자치단체 .....	56
가. 서울특별시 .....	56
나. 대구광역시 .....	63
다. 인천광역시 .....	65
라. 경기도 .....	72
마. 충청남도 .....	79
바. 전라북도 .....	81
사. 강원특별자치도 .....	84
8. 공공기관 .....	88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88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88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88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89

마. 공무원연금공단 .....	90
바. 도로교통공단 .....	90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91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92
가. 서울경찰청 .....	92
나. 대구경찰청 .....	95
다. 인천경찰청 .....	97
라. 경기남부경찰청 .....	99
마. 경기북부경찰청 .....	103
바. 충청남도경찰청 .....	104
사. 전라북도경찰청 .....	106
아. 강원경찰청 .....	108
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110
차. 새마을운동중앙회 .....	110
카. 한국자유총연맹 .....	110
<b>V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b>	<b>111</b>
1. 행정안전부 .....	11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22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124
4. 인사혁신처 .....	125
5. 경찰청 .....	127
6. 소방청 .....	132
7. 지방자치단체 .....	137
가. 서울특별시 .....	137
나. 대구광역시 .....	144
다. 인천광역시 .....	144

라. 경기도 .....	146
마. 충청남도 .....	148
바. 전라북도 .....	149
사. 강원특별자치도 .....	151
8. 공공기관 .....	153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3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153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53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153
마. 공무원연금공단 .....	154
바. 도로교통공단 .....	154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154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155
가. 서울경찰청 .....	155
나. 대구경찰청 .....	158
다. 인천경찰청 .....	159
라. 경기남부경찰청 .....	162
마. 경기북부경찰청 .....	165
바. 충청남도경찰청 .....	166
사. 전라북도경찰청 .....	167
아. 강원경찰청 .....	168
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169
차. 새마을운동중앙회 .....	169
카. 한국자유총연맹 .....	170
<b>VII. 증인 및 참고인 현황 .....</b>	<b>171</b>
1. 기관증인 .....	171

가. 기관증인 총괄 .....	171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	172
2. 일반증인·참고인 .....	173
가. 일반증인·참고인 총괄 .....	173
나. 일반증인·참고인 출석 현황 .....	174
다. 일반증인·참고인 철회 현황 .....	176

#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4. 5. .

행정안전위원장

## I.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의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함.

## II. 감사기간

2023. 10. 10.(화) ~ 2023. 10. 27.(금) [18일간]

### Ⅲ. 감사실시 대상기관

####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

- 1) 행정안전부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4) 인사혁신처
- 5) 경찰청
- 6) 소방청
- 7) 지방자치단체
  - ① 서울특별시
  - ② 대구광역시
  - ③ 인천광역시
  - ④ 경기도
  - ⑤ 충청남도
  - ⑥ 전라북도
  - ⑦ 강원특별자치도
- 8) 공공기관
  - 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③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④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⑤ 공무원연금공단
  - ⑥ 도로교통공단
  - ⑦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 ① 서울경찰청
- ② 대구경찰청
- ③ 인천경찰청
- ④ 경기남부경찰청
- ⑤ 경기북부경찰청
- ⑥ 충청남도경찰청
- ⑦ 전라북도경찰청
- ⑧ 강원경찰청
- 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⑩ 새마을운동중앙회
- ⑪ 한국자유총연맹

다. 업무현황보고서 제출요구기관 (주무부처 국감 시 기관장 배석)

1) 행정안전부 산하

- |             |             |
|-------------|-------------|
| 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②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③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④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⑤ 지방공기업평가원  | ⑥ 한국섬진흥원    |
| ⑦ 새마을금고중앙회  | ⑧ 한국지방세연구원  |

2) 경찰청 산하

- |         |              |
|---------|--------------|
| ① 경찰공제회 | ②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

3) 소방청 산하

- |            |            |
|------------|------------|
| ① 한국소방안전원  | ② 대한소방공제회  |
|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 ④ 한국소방시설협회 |



## Ⅳ. 감사실시 경과

### 1. 감사반의 편성

#### 가. 중앙감사반

○ 위원장, △ 간사

대 상 기 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 무 보 조 직 원
행정안전부	○ 김교흥 위원장 (민)	△ 강병원 위원 (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인숙 위원 (민)	전문위원 박규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진석 위원 (민)	전문위원 신문근
인사혁신처		송재호 위원 (민)	행정실장 황준연
경찰청		오영환 위원 (민)	입법조사관 임채진
소방청		이해식 위원 (민)	" 윤여문
서울특별시		이형석 위원 (민)	" 황수환
인천광역시		임호선 위원 (민)	" 전성민
경기도		천준호 위원 (민)	" 민성철
서울경찰청		최기상 위원 (민)	" 신홍철
인천경찰청		△ 김용판 위원 (국)	" 김성원
경기남부경찰청		권성동 위원 (국)	" 공수정
경기북부경찰청		김기현 위원 (국)	" 최한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 웅 위원 (국)	" 최영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박성민 위원 (국)	" 김형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만희 위원 (국)	" 신강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전봉민 위원 (국)	" 이희석
공무원연금공단		정우택 위원 (국)	" 박철환
도로교통공단		조은희 위원 (국)	행 정 관 백승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용혜인 위원 (기)	" 조예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이성만 위원 (무)	주 무 관 이화자
새마을운동중앙회			" 김문주
한국자유총연맹			" 이현진
			속기주무관 6인
			정책연구위원 3인
			위원보좌진 22인

## 나. 지방감사반

감사반	대상기관	감사반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제 1 반	충청남도	김교흥 위원장 (민)	강병원 위원 (민)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라북도		문진석 위원 (민)	전 문 위 원	신문근
	충청남도경찰청		이형석 위원 (민)	행 정 실 장	황준연
	전라북도경찰청		임호선 위원 (민)	입법조사관	윤여문
			천준호 위원 (민)		민성철
			김기현 위원 (국)		신희철
			김 웅 위원 (국)		최한슬
			정우택 위원 (국)		최영표
			전봉민 위원 (국)		신강수
			조은희 위원 (국)		박철환
제 2 반	대구광역시	김용판 위원 (국)	권인숙 위원 (민)	전 문 위 원	박규찬
	강원특별자치도		오영환 위원 (민)	입법조사관	임채진
	대구경찰청		이해식 위원 (민)		황수환
	강원경찰청		송재호 위원 (민)		전성민
			최기상 위원 (민)		김성원
			권성동 위원 (국)		공수정
			박성민 위원 (국)		김형래
			이만희 위원 (국)		이희석
			용혜인 위원 (기)	행 정 관	백승운
				속기주무관	3인
				정책연구위원	2인
				위원보좌진	10인

## 2. 감사 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0. 10. (화)	10:03~22:00 (21/22)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정부세종청사	
10. 12. (목)	10:04~19:21 (21/22)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10. 13. (금)	10:15~21:42 (22/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회	
10. 16. (월)	10:05~17:48 (22/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19:33~21:58 (20/22)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10. 17. (화)	10:04~16:28 (20/22)	경기도	경기도청	
	17:08~19:13 (20/22)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10. 19. (목)	10:08~15:24 (20/2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일 자	감사시간 (출석/재적)	대상기관	장 소	비 고
	15:56~17:42 (20/22)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10.23. (월)	10:03~12:12 (10/12)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지방1반
	14:31~15:45 (10/12)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10:00~12:19 (9/1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	지방2반
	14:02~14:55 (9/10)	대구경찰청	대구경찰청	
10.24. (화)	10:05~12:13 (12/12)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지방1반
	14:31~15:40 (11/12)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10:00~12:03 (9/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지방2반
	14:00~15:01 (9/10)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10.26. (목)	10:02~21:17 (22/22)	<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국회	

## V. 감사실시 주요내용

### 1. 행정안전부

#### 【대변인】

#### 【기획조정실】

#### 【의정관】

- 홍범도 장군이 2021년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상훈법」 제4조의 중복수여금지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훈장 취소 가능 여부 질의

#### 【감사관】

- 전 경기도지사 및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보장감사 요구 필요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보완 필요
- 행정안전부가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감사를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인사기획관】

#### 【운영지원과】

#### 【디지털정부실】

- 헌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평가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완 필요성

○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 본인정보 전송 오류 감소 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 개선 추진 관련 세부계획 및 데이터 제공 상향평준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시 공지 방식 개선 필요

○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및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획기적 개선 필요

○ 모바일 신분증 사용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한 불편 해결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필요

○ 모바일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기술적·제도적인 방지책 마련 필요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안전부도 예산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에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소관 출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혁신조직국】**

○ 통합행정사회 출범 이후 설립인가취소소송 및 행정사회 내부 운영 문제 관련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질의

○ 비교과 교사의 법정 정원 확충 필요

- ‘외로움과 고독’을 전담하는 부처 도입 필요성
- 신당역 스토킹 사건 이후 법 개정으로 2024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전자장치 감독인력을 충원하여 재범률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
- 각 부처의 공용차량 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
- 온나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탐지 문제 개선 필요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단체사건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피해자 및 유가족 주소 확인 및 고지에 필요한 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구급차·소방차·경찰차의 앞자리 번호로 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시키는 제도가 노후화된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및 다른 국가기관에도 확산시킬 필요
- 재난안전본부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국민안전부로 격상하여 독립시킬 필요
- 스토킹 처벌법 시행 관련 전자장치 모니터링 요원 인원 확보 필요

## 【경찰국】

- 자치경찰의 이원화 등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순경 출신 30% 이상을 경무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하여 로드맵을 세워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경찰국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점검 필요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태원 참사 책임에도 불구하고 유임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조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조치가 있어야 하며, 법적인 정비 필요
-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 기한으로 구성된 후 연장되어 1년 이상 존치되고 있으므로 권고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 필요

## 【지방행정국】

-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법정지원단체가 선거 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의 편성(국비-지방비 5 : 5 매칭)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위반 지적
- 현재 건립 중인 ‘민주인권기념관’의 명칭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에 따른 법상 명칭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정정할 필요

-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국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 등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 필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활동에 이념편향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감독권을 활용하여 개선할 필요
-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의 선거 개입 우려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
- 2018년 자유총연맹의 정관 내 정치적 중립 조항의 신설을 허가하였으나 이후 정치적 중립 조항의 삭제를 재차 허가한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 선양·발전을 위한 여러 연구 및 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명칭에 대한 발전적인 재검토 필요
-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확실한 의지 피력 요청
- 우키시마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유해 280위의 국내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협의하여 노력할 필요
- 선감학원 2차 매장 추정지에서 발굴된 분묘들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예산 수립 및 추가 발굴 지원,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가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으로 다시 규정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등록요건 확인과 부정 사용시 보조금 교부 배제 의무화 조치 필요
- 현 정부 출범 이후 갈등 사례와 관련하여 국민통합위원장의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를 통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 지원 등 역할이 없고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제안서를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않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국민통합위원회의 명칭과 관련하여 ‘통합’이라는 단어는 전체주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화합’이 적절
- 트라우마센터는 국립시설로 지방비 50% 매칭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관계 특례에 관한 「4·3사건법」 개정법률안이 11월 9일 상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필요
- 제주4·3사건 보상금 2023년도 예산 1,810억원 중 3분의 1인 626억이 지급된 상황이므로 원활한 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보상분과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확대 필요

-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4명은 전문가들이므로 분과위원회에 모두 배치 필요
- 제주4·3기록물의 관리 뿐 아니라 사료 수집 및 전시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선감학원 아동인권 학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 국가기관의 조속한 공식적인 사과 필요
-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책임있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선감학원 유해발굴과 유해 안치 및 추모공간 조성 사업 조속한 추진 필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예년의 일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제안할 포상대상을 확정한 상황에서 사전 소통과정 없이 사업 변경을 결정하고 구두로 수시 포상 변경을 통보한 것은 부적절
-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전담팀 구성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훈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

- 비영리민간단체가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정기적 등록요건 확인과 부정 사용시 보조금 교부 배제를 의무화 할 필요
- 공공분야 전국 직장 내 갑질 실태 점검 및 전국 시·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할 필요

### 【자치분권국】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편화를 위해 최초 발급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위기가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행정안전부는 전년 대비 인력 동결 및 재배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주민자치회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할 필요
- 통장의 기본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반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지방공무원 토착화 방지를 위한 순환근무 필요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및 직무범위 가이드라인, 교육과정 확대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보직연구관을 적극 운영하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 지방 간부공무원 장기 교육훈련 교육 인원 배정 방식 개선 및 교육 선발 대상 확대 필요
- 50만 이상 지자체 실·국 설치기준 개선 및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
-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임신부 수, 출생아 수 등 세부적인 모자의료 항목 신설 필요
- 지방공무원 장기미임용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
-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의회사무기구 내 중간직위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5 폐지 등에 대한 입장 질의
- 까다로운 청구요건 및 비용부담으로 주민소환제가 유명무실한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개선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질의
- 대구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재난조직을 광역 단위 (가칭)국민안전부 직속 광역 안전청 및 기초 단위 시군구 안전지원청으로 개편 필요
- 현장에 출동하는 재난대응조직은 소방청 직속의 시·도 소방청과 지역 소방서로 개편하여 국가사무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본부장과 과장급 사이의 중간 직위 설정 등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급 조정 문제 조속한 조치 필요
- 소방관 PTSD·우울증 정신건강 치료관리 필요군이 70%, 10만명 당 자살 통계도 31.2명에 달하나 휴식과 치료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므로 소방인력의 증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과근무가 과다한 것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부 체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재난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 및 과도한 초과근무 감축을 위한 노력 필요
- 7급 이하 저년차 공무원 봉급 추가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TF 구성 등 공무원 임금 인상 관련 질의
-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가 791명에 불과하여 업무 과중으로 퇴직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균형발전지원국】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교육·홍보사업 등 필요
- 고속도로 등 도로변에 게시된 옥외광고물, 광고물 게시를 위해 건축된 가건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태에 대한 단속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의대를 졸업하면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모금 실적이 저조함. 일본의 고향세를 모델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일본의 사례를 잘 연구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민간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되므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기부 허용, 기부금 상한 제한 폐지, 지정기부제 도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기회발전특구제도 도입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집행 관리 필요
-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급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급 변경과 관련하여 예산을 감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려 불식시킬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3,000억원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각별한 관심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옥외광고 관련 전담부서 신설 필요
- 벽면이용간판 설치 가능 층수 제한규정 완화 및 5제곱미터 이하 간판도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질의
- 옥외광고물 설치 및 시공은 옥외광고사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
- 실질적인 섬지원 체계 방안 및 한국섬진흥원 원장과 이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 방안, 섬 주민 대표 참여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

### 【지방재정경제실】

-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채무 증가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문제 지적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한 체납지방세액이 상당하므로, 시효 연장, 재산추적, 조세채권확인 등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활동 점검 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할 필요
- 2023년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수취·불법환전, 유통 가맹점,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위조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
- 지방 공공기관이 급격히 늘어나고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데, 추진 과정에서 기업은 세금이 부과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국채 발행 또는 지방교부세 기준연도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적극적인 예산 편성 요구
- 지방교부세 법정을 인상 및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대안 마련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을 건전화시킬 필요
-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 필요
-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를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 기초적인 복지, 인권 영역이나 미래산업 영역이 세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토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므로 유념 필요

- 새마을금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 담보 매각을 통한 인한 원금 회수 불투명성, 새마을금고 규정 변경을 통한 연체채권 탕감 이사장 전결 등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와 같은 규제를 철폐하고 LH, SH 등 각 시도의 도시공사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새마을금고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10대 혁신과제 중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과제에 갑질 문화·불이익조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이 포함될 필요
-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질의
- 새마을금고 임원의 성추행·갑질 사건 등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감독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새마을금고와 관련하여 중앙회장의 중임 제한, 임원의 연봉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금고 이사장·임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할 필요
- 대출잔액 및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나,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능력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

-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정수급이나 불법 환전에 쓰이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유흥주점 등 제한업종에서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면밀한 점검 및 시정 필요
- 국책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관리 비용 등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 자체를 꺼리는 사례도 있어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 필요
- 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방식을 발주자 지정 방식에서 입찰자 선택 방식으로 변경한 사안과 관련하여 종전의 발주방식으로 복원함이 타당하다는 지적
-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 현장 안전 강화 및 부실 예방,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로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지적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
- 회생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추진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 불법시위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소관 지침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할 필요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개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세부계획  
질의
- 지방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임금 인상분에 대한 행정안전부 총액 인건비  
인상률 통제에서 예외 적용 정책 필요
- 착한가격업소 관리·감독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정책을 제한  
할 필요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개선 필요
- 잼버리 파행 이후 동원되었던 1만 명에 이르는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중앙부처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 잼버리 파행 이후 숙박·식비, 케이팝 콘서트 비용, 버스 임차료 등 약  
252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의 전용이 원칙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한 지적
-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관  
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간 재원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근절대책 마련  
필요
- 특정 집단이 지자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국 전수

조사를 실시할 필요

- 전라남도의 남부권 관광개발 계획 관련 주무부처 및 예산부처와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준 차이 개선 필요
-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대한 운용 현황 파악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을 내부고발한 지역금고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과정에서 허위진술 강요 등이 있었음이 드러나 면직취소 및 복직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중앙회에서 사변부여를 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 필요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안전감찰담당관】**

#### **【안전예방정책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조치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를 독려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필요
- 설치된 CCTV가 노후화되고 있으나, 2013년도에 운영규칙이 만들어진 후 CCTV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교체주기, 화질 등에 대한 관리조항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필요
-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해 매달 실시하는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준이 형식적이고 모호하여 자체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 정비 필요

- 현재 노후 승강기의 비율이 30% 정도이며, 노후 승강기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후 승강기 안전장치 교체에 대한 비용 지원 검토 필요
- 재난문자의 경우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발송하는 문제를 시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보유한 관측장비를 통해 상황에 맞게 발송할 필요가 있으며, 담당자가 발송 방법 숙지 필요
- 재난안전통신망의 기관 활용이 저조하며, 정기교신 훈련 응답률 또한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내실화 필요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미흡하고 추진상황이 부진하였다는 지적
- 서버 용량 부족으로 CCTV 화소 수준을 임의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는 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조치 필요
- 재난안전통신망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예산 편성 필요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 안전교육 수행기관 선정 적정성 여부 질의
- 승강기 수리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필요
- 대피소별 대피 가능한 재난 및 연락처 등 정보표기, 재난 시 대피소 실시간 정보공유와 재난별 대피소 신설 지정 필요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재난 통신 원칙 재정립 필요

## 【자연재난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진척 속도가 더딘 주된 이유는 사업비 확보, 보상 등 재정 문제이므로 현행 50%인 국가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이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인구수가 적거나 과거에 피해 사례가 없으면 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지정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 시 재난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 필요
-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 활용지침을 정리하고 예방·대비 과정에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홍수위험지도 등을 활용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방재안전직 전문화 계획 필요
-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대책 발표 후 제대로 된 이행 부족 문제, 정확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성
-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방재매뉴얼 시스템 정비 필요

-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재난안전책임체계 재정비 필요
- 선제적 재난 예방대책으로 안전대피시설 구축 및 지하차도 위험등급 기준 개선 필요
-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사전 경고 무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지적
-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훈련을 통한 매뉴얼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수평적 지휘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사회재난실】**

- 이태원 참사 1주기 전에 믿음과 신뢰 속에 유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10.29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고위직 책임자가 사퇴 등의 형식으로 재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
-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하여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을 설치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할 필요
-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
-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치·운영 필요
- 이태원 특별법안 관련 조사위원회의 무제한적인 자료·물건 제출요구



권,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영장 청구 의뢰, 영장 미청구시 이유 통보 의무, 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 중단, 동행명령 등 적절성 문제 검토 필요

○ 다수사상자재난 발생시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필요

○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후 활용 미흡 지적

### 【재난복구지원국】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약 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결 없이 사무총장이 전결 결재한 것이 5년간 7만 8,000건, 592억원으로 파악되는 바, 행정안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을 필요

○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재민 임시주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필요사항을 보고할 필요

○ 2023년 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진도율 및 국비 자금 교부 현황에 대해 질의

○ 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관련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필요

### 【비상대비정책국】

○ 민방위 대피시설이 대도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대피소가 없으므로 개선 필요

○ 민방위복이 제복으로서 통일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규격 및 재질을 인증받은 제품 위주로 통일성 있게 구입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헌혈자의 민방위 훈련시간 인정 확대 필요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국가기록원】**

- 전문적 복구 프로세스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중요 전자기록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기보존체계 구축에 기여할 대책 마련 필요
- 기록물 생산시스템에서 손상된 상태로 이관되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담당부서와 국가기록원이 다년간 협의한 결과를 제출할 필요
-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전자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보자산이 얼마나 소실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정부청사관리본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대통령기록관】**

#### **【이북5도위원회】**

- 이북5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실무조직인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명예시장 등을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 폐지 필요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검사에 필요한 첨단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국가융합망 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기타】**

- 중앙·지방정부의 보조금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실태 점검 및 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선거지원사무 관장 부처로서 선거관리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컨설팅 결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문제의 중요성 지적

-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여부에 대한 질의
- 재난지원금, 신재생사업, 공무원 인력 증원, 지방공기업 신설,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적절성 및 효과성 여부에 대한 지적
- 집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는 기간에 설치된 집회 현수막에 대한 대책 질의

###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의】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청북도의 재난안전대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여부에 대한 지적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당시 충청북도지사의 상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질의
- 오송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한 임시제방 및 60년 동안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호천 준설에 있다는 지적
- 오송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
- ‘오송참사 현장에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도지사가 사과할 필요
- 오송참사 전날 23시 도지사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영상회의를 주재했다는 회의 결과보고는 회의 녹취록, 국가지도통신망 활용기록 등에 비추어 허위라는 지적

- 오송참사 직전까지 도지사에게 미호천 제방 범람과 궁평2지하차도 침수위험을 알리는 전파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도지사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라는 지적
- 도지사가 오송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할 필요
- 오송참사와 같은 중차대한 재난상황에서는 기관 간 관할, 관리주체 등에 관계없이 사고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지적
- 오송참사와 관련된 인명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음에도 유가족 면담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도지사의 발언은 허위라는 지적
- 재해의 발생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송참사의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지사의 책임감 부족 및 안이한 생각이 원인이라는 지적
-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재난안전대책이 청주시 등 지자체 현장에서 잘 집행되었다면 오송참사도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
-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답변 태도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도지사로서 오송참사의 원인과 방지대책을 명확히 밝힐 필요
- 이상래 증인(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청장 재직 당시 오송 참사 발생 전날인 14일 비상위기대응 3단계가 발령된 시점에 서울에서 공무상 만찬을 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현장 도착이 늦어 안전조치 및

감독 의무 준수가 미흡하였다는 지적

-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과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동 제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설치·관리에 책임이 있으므로 이상래 증인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에 대해 사과 필요
-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상래 증인의 발언과 답변 태도 부적절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사무총장 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자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중앙선관위 내부 업무망이 외부로부터의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놓여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독점하다시피 해 온 부실한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강 필요
- 가족 특혜채용 의혹 문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및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 지적
- 보안컨설팅 결과 등 현안 관련 문제에 대해 위원장의 책임 표명 및

##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

- 2024년형 본인확인기 입찰과정에서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인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부정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
-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위배에 대한 지적
-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공공전산시스템인 선거관리시스템의 전문 운용 인력 및 전문 보안업체 부족에 대한 지적
- 사전투표, 개표방식, 통합선거인명부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 지적
-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로 인쇄하고, 바코드 인쇄가 어렵다면 선거일투표와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 일련번호 표기 필요
-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표 및 선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취약점 보완 필요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적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유 중인 전체 전산망에 대한 보안 점검을 통해 해킹 대비 필요

- 국정원 보안 컨설팅은 보안의 핵심인 시스템 구성도, 소스코드, 관리자 계정을 사전에 제공하는 등 실제상황과 다른 조건에서 해킹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것으로 해킹 가능성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
-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독점적 인사운영 문제 지적
- 국회 출석 대상을 사무총장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권자 중 1명인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필요
- 채용공고 또는 면접도 없이 행정지원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문제 지적
- 다른 헌법기관에 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화예산 편성 비율이 4.9%로 낮으므로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 2022년 4월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
-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안전검토수당을 3배로 올려 지급한 것에 대한 지적
- 국정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안시스템 점검의 보안점검 방식 및 보안점검 결과 발표 시점 부적절
- 보안컨설팅 과정에서 국정원에 제공된 중요 정보들이 제대로 파기되지



었는지 확인 필요

- 투표자의 관리 편의성보다는 신뢰성이 더 중요한만큼 사전투표에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 필요
- 보안컨설팅 과정에서 국정원이 설치한 보안점검 틀이 선관위 시스템에서 모두 제거되었는지 확인 필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사전투표·개표 장비 구입 예산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제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예산 확보 방안 마련 및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 현실화 필요
-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및 투표절차 개선을 통해 투표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의 선거제도 연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제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의 선거보전금 미반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지난 선거의 투표지 보관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적 실태 파악 필요

-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하여 투표용지 보관, 기표용구·특수봉인지 관리, 참관인 신분 등의 문제 지적
- 신축 청사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 문제, 선관위 직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 대한 지적
- 현재의 개표방식은 수개표가 아니라 전자적 방식에 의한 개표임. 개표의 정확성을 위해서 수개표방식으로 전환 필요
-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홍보물·발언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선관위의 적극적인 규제 필요
- 투표지분류기 해킹 가능성 및 해킹을 통한 투·개표 결과 조작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서 외의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바, 시정 필요
-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관련하여 2023년도 발굴 현황을 보면 1개 지역으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소문에 의존하여 발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선정 기준 필요
-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2021년 4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군인, 경찰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경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편견과 선입견, 명예훼손이 우려되고, 학살 주체가 우리 군경에서 인민군·좌익으로 변경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위원장 발언은 전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등 부적절하므로 유의 필요
- 내부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같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가 아닌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외부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과 국정감사 기간 중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결정 필요
- 영천 지역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 진행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조사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이 확정된 부역자가 아닌 재판 없이 즉결처분 당한 부역 혐의자에 대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역 여부에 대한 조사·결정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사건의 불법성을 밝혀 진실규명 결정을 하는 것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
- 진실·화해·책임·미래를 모두 보여주는 제주4·3사건의 과거사정리 모델

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움직임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나 문화재청 차원을 넘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 필요

-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강제징집,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이미 진실규명이 된 사건들에 대한 원활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직권조사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선감학원 2차 발굴에서 발굴된 유해와 유품에 대한 관리계획 및 선감학원 진상조사 계획은 무엇인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국가폭력의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던 조직인 군 또는 경찰 등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국가폭력을 조사할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 필요
-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과 다른 기준으로 사건을 심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쟁 전후 국방경비법 등 적용실태 연구」 용역보고서의 권고를 조사와 결정문 작성에 참고하겠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입장은 부적절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해발굴 사업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 조직 역량을 기관 설립 목적인 조사에 투입할 필요

## 4. 인사혁신처

### 【인재채용국】

- 심리안정휴가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부족한 현장대응 인력 충원 필요

### 【인사혁신국】

-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들에게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안식월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 필요
-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방안 마련 필요
- 장기 근속 연구사에 대한 봉급표 상향, 연구직에 대한 계급체계 개편 등 검토 필요
-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전일제로 통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공무원의 전문성 저해요인인 짧은 순환보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무원의 정치·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후원 등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필요
- 공무원이 진출하는 국제기구 직위를 확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자격과 역량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인사관리국】

-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청년 공무원 이탈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무원 임금교섭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여, 위원회 합의안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지급시기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필요
- 퇴직수당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금액산정 방식 개선·유족에 대한 상속권 인정·민간부문의 퇴직금 금액과 형평성 확보 등 제도 개선 필요
- 7급 이하 저연차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필요
- 분야별·직급별로 상이한 항공수당을 일원화하여 지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윤리복무국】**

-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결정 불복절차 등으로 인한 의무이행 지연·회피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 현장 공무원인 경찰, 소방, 우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검토 필요
- 현장근무 전담 수행 소방공무원의 직급 상향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합리화 필요

#### **【인재정보기획관】**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하여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고 있는 인사검증 업무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재해보상정책관】

-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접근성 개선 필요
- 순직 공무원이 사후에 추서되는 경우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연금 등 지급 필요
- 공무상 재해에 따른 경찰·소방 등의 간병비는 2023년 기준 일일 6만 7140원으로 시중 간병비 대비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간병비 기준도 현실적으로 문턱이 높아 조속한 시정 필요
-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 지급 기준과 수준 현실화 필요
- 자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심의 시 교육직 공무원 참석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공상추정질환 중 근골격계 질환의 범위 확대 필요

## 5. 경찰청

-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 인력 전문화·예산 확대 필요
- 가정폭력 사건을 위험성 조사도 없이 현장 종결하는 등 부실 대응 사례가 있어 확인 필요
-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확보 필요
-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 수사 필요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안 중 수사심사관을 폐지하는 내용은 재검토 필요
- 저위험권총 보급 관련 안전성 검사 등 확인 필요
-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필요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부실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 추궁 필요
- 김건희 여사 관련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포 용강지구대 간담회에 경찰관이 동원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 2023년 8월 22일 일본 대사관 앞 국회의원의 항의서한 전달에 대한 경



찰의 과잉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종로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필요

-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전국 259개 경찰서의 치안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각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조직개편안 마련 필요
-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저위험 권총 예산으로 배정한 돈으로 리볼버를 구매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편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 이상동기 범죄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 노력 필요
- 故 표예림 사건 등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 마련 필요
- 경찰대학 졸업생이 로스쿨 진학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력관리 대책 마련 필요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과 훈련에 대해 상세한 매뉴얼·기준을 마련하고 현장경찰관 대상으로 충분한 훈련 및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북한과 관련된 마약수사·안보수사 관련 일선 경찰관이 역을하게 징계 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
-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업무범위 확대 과정에서 국가경찰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

- 관련 부처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발표한 것은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 경찰의 조직·권한·위상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일할 필요
- 양평 공흥지구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재수사 검토 필요
- 구인·구직사이트에 업로드된 이력서를 범죄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 그 안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해외도피 범죄자의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터폴 및 국제적 공조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지휘관 수사역량 강화 필요
- 집회시위 시 소음기준 및 차량의 인도 침범 등 개선 검토 필요
- 경찰청이 9.21.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개선 방안’에 대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는 없는지 재검토 후 개선 필요
-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의 지정을 이용하여 집회·시위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
- 법률에 직접 규정된 경찰위의 심의 의결 사안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

휘규칙에 의해서 다시 장관의 승인 사항이 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 제20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원하던 조직의 한 간부 출신이 라임 사태 자금이 흘러간 필리핀 불법카지노의 실세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 제기
- 마약사범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사적성검사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
- 가상화폐 관련 범죄 문제가 심각하므로 불법행위 피해 대책 마련 필요
-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기재부 보조금 여부와 관계없이 통계를 파악하고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대응 필요
-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제도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
-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치안 센터를 자율방범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민간행사 경비에 기동대를 동원할 경우 해외 사례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
- 세종과 제주에 형사기동대 설치 필요
- 간이시약기로는 신종 마약 검출이 어렵고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 등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으로 식약처 공조 등 대책 마련 필요
- 경찰청 차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 범죄 진압·예방 등 경찰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체력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경찰관 채용 시 체력검정 반영 비율을 높일 필요
- 수사준칙 입법예고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 도입을 위한 관심 필요
- 공상경찰관 지원(요양급여, 간병비 등) 현실화 필요
- 화재감식요원 등 일선 경찰관이 공상추정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대·스토킹 관련 인력·예산 확대 필요
- 조폭 유튜버의 불법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파장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요구되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불법 콘텐츠의 근원적 차단·근절 노력 필요
- 불법무기 유통·제조 단속을 위해 위장수사 도입 여부 검토 필요
- 부적격자가 총포를 소지할 수 없도록 총포소지허가증 발급 갱신 기준

## 강화 필요

-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필요
-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충북도로부터 위기경보 3단계 심각단계가 발령되었다는 내용을 충북경찰이 전파받았는지 확인 필요
-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금지가 아닌 제한을 선택할 필요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요에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한 문제 개선 필요
-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근거로 적용된 신원보증서 관련 관행을 개선할 필요
- 스마트워치 고도화 R&D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 필요
-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연령·성별 편중을 막아 지역 내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치안정책과 관련 없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등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교통시설 개선 노력 필요
-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출생 미신고아동 9,003명(2010~2014년 신생아)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하여 수사할 필요

-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인 경찰권 분산이 사실상 체감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경찰관 대상 정기 마약검사 도입 필요
- 명예퇴직 예산 부족분은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 수당 등을 조정하여 명예퇴직 신청자를 구제할 필요
- 온라인 중고거래 및 게임 아이템 사기 등 사이버 사기범죄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현장 위험직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자 안식월제 도입 필요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 등의 부정확한 신상정보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거주지 현장점검 필요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누락·지연된 경우가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농촌지역 치안센터 폐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급속도로 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 필요
-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이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이후 전국 시도청으로 이송되었는데 전국 통합수사 필요

- 사기정보분석원 도입 추진시 사이버캡 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 김순호 전 국장에 대한 보안사 작성 문건의 공무상 기밀누설죄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을 바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가 아닌지

## 6. 소방청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청주 서부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허위로 보고된 것인지 여부 확인 필요
- 시·도 소방본부는 경찰조직에 비해 중간 간부의 직위 수가 부족한데,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중간 조직·직위 신설 노력 필요
-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불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소방관에게 법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가혹하며 조속히 수사 결론을 낼 필요
- 소방활동 방해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요구하고 강제처분하기까지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신속한 진로 확보를 위한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 보완 검토 필요
- 수해에 대비한 양수기 보유율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많은데, 양수기 보유 관련 규정에 맞게 보유하도록 조치할 필요

- 119 출동 골든타임 충족 통계를 보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낮고 응급 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역도 지방이 많은데, 소방인력과 예산에 있어 지방의 비중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고, 열악한 오지 등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도 불구하고 소방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족하고 소방장비구매비가 소방특별회계 전체의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소방 인건비 및 장비구매 비용의 국가 지원 필요
- 화재진압·재난대응 중에 소방관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 확실히 조치되도록 보장할 필요
- 소방헬기 기체 노화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2022년 기준으로 약 113억 원인데, 신규 소방헬기 도입 대책 및 노후 수입헬기 부품 비축 등 원활한 수리·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현장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발하므로 시민 대상 홍보 등 소방대원의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처방안 마련 필요
- 구조 분야 경력요건 전수조사 결과 경력미달로 추정되는 재확인 대상자 관련 문제는 해당 소방관뿐만 아니라 당시 시·도 소방본부의 책임도 고려하여 상호 간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당부
- 경북·강원 지역에 산불 피해가 크고 이와 관련 산림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계획이 수립되고도 공정 현황이 부진한데, 국고보조사업의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계획 보완 필요



- 화재안전조사 실시 실적이 코로나19 상황 이후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화재안전조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 마련 필요
- 산불,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이 빈번하나 소방청 장비 수준은 뒤처지고 있는데, 위험물 화재진압 및 수재대응에 효과적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산불진화에 효과적인 산불전문진화차량 등의 추가도입계획 마련 필요
- 소방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방예산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일원화하고 소방재정 특별회계를 독립시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완성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조직법」, 「소방특별회계법」 등 관계 법률안 통과를 위한 소방청장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영화관은 화재에 취약하고, 특히 시설자재 중 흡음제의 경우 불연성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흡음제 등 실내장식물 물질 인정제도 도입 등 안전성을 강화할 방안 마련 필요
- 인명탐색 개인안전보호 장비인 라이트라인이 구조활동 시 활용되고 있지만 낙하물에 의한 케이블 훼손시 사용 불가, 취약한 내구성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라이트라인의 결함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9코드 분류 상의 문제가 있고 경찰에 통보가 안 되어 교통통제가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까운데, 경찰 등 유관기관 통보 시스템 개선 필요. 또한 긴급구제통제단 가동 시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바,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할 필요
- 소방관이 착용하는 웨어러블캠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시·도 소방본부

별로 보유량, 제원, 구매가격이 제각각이고 바디캠 등은 엄밀히 따지면 규정이 없어 불법장비로 보임. 이와 관련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 관리 규정 마련 및 위변조방지 장치 운영 등의 조치 필요

- 시·도소방본부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경찰조직과 비교할 때 중간간부층이 미흡한바, 본부장이 특정업무에 집중할 때 나머지 부서를 통솔할 수 있도록 부분부장을 두든가 중간직급체계를 강화할 필요
- 용인시 등 여러 지역의 경우 구급대원 1인당 담당 인구 통계를 보면 업무부하가 과다하므로 구급인력 충원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이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어 있는데, 수당 인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소방대원의 병가 및 휴직이 증가 추세이고, 특히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대체인력 채용은 크게 부족하므로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확대 필요
- 대구광역시 등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설치 추진방안 마련 필요
- 응급환자 수용거부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있는 병원의 경우 고발하는 등 협조와 강경 대책을 같이 마련할 필요
- 소방헬기 조종사 전문화를 위한 모의훈련장이 없는데, 소방헬기 모의 비행훈련장 마련 추진 필요

-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사업 관련 KT와의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하여, 소방청 직원이 특정업체의 장비를 납품 지시하고 뇌물을 요구한 비리를 덮으려한 의혹이 있는바 철저한 조사 필요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 구조자 녹취록에 따르면 수난구조 관련하여 소방당국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19구조견이 구조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사 배치 등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보이는데, 119구조견 보호·관리 개선 필요
- 구급차 미이송 건수, 도착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급차 유료화나 환자의 지정병원 요구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추진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구급차 이송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 추진 필요
- 응급상황에 대한 시·도 공동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심신수련원 확충 필요
- 소방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급차 중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은 26.1%에 불과한바,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이 효과가 있도록 단말기 보급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청장은 자택 귀가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중에 소방청 간부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청장을 데리러 오기 위해 중앙통제단 소속 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한 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한 감사와 관련자 징계 조치 필요

-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드론의 80% 가량이 중국산인데 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구급차 교통사고 관련 보험료가 지자체별 차이가 크게 나는데, 전국통합보험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중형구급차 보급이 전체 구급차의 4.1%에 불과한데, 구급활동 역량 향상을 위해 중형구급차 보급을 확대할 필요
- 소방공무원 등 현장 위험직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
- ‘연기’가 화재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조사되는바, 제연설비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전문인력과 전문장비에 의한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점검제도를 개선할 필요
- 시·도 소방공무원 출동 간식비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인상 계획을 마련 필요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한하여 유가족의 구급활동일지 열람이 허용되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색구조 지침서를 참조하여 구조자·사망자 고유번호 부여, 수정절차 마련 등 대형 참사 시 체계적인 신원확인제도 확립방안을 마련할 것

## 7. 지방자치단체

### 가.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공공급식 사업 참여 특혜를 부여하면서 불필요한 유통비용과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궁극적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및 비서실장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
- 서울특별시 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장의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 제기
- 서울특별시시장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필요성 제기
-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의 노후화에 따른 정비 필요
- 체납세금 징수 실적과는 별개로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 부분 미비 지적
- 무단휴업 택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미온적 대처 지적
- 서울특별시가 공동주택단지 관리감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
-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화재나 교통사고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련 SH공사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매입을 했다는 지적
- 교통유발부담금 채납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
-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이 혼잡한 곳에 쓰이는 등 목적에 맞게 집행될 필요
- 대형쇼핑몰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 관련 사건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새롭게 다른 사건을 수사를 시작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는 등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의견
- 이상동기범죄 등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노력 필요
- 기후동행카드 지원금이 서울시민 1인당 평균 월 교통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수도권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야 효과가 있다는 의견
-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서비스의 제도적 미비점 지적
- 서울특별시가 경찰청, 소방청 등과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

- 재난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평적 기관 간의 통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해야 할 필요
-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관련 SOC 인프라 투자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지하철 불법 무임승차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해치TV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한 노력 필요
- 우리아이 안심병원 프로젝트의 미비점 지적
- 은평새길 노선에 대한 종로구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의견
-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적절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삭감 및 집행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미온적 태도 지적
- 모아타운사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 관련 미비사항 지적
- 서울 생활쓰레기의 인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초과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대체매립지 확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해결 방안 등 노력 필요
- 신월-여의 지하차도 통행료 인상 및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지연 지적

- 강서구의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있다는 의견
-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 상향대책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사업 추진 미비 지적
-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적극적 노력 필요
- SH공사 콜센터노조 직접고용과 관련한 전향적 입장 촉구
- CCTV 인파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CCTV 증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
- 서울특별시 내 지하차도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
- 한강리버버스 도입은 내실있게 추진될 필요
-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와 관련한 국가, 서울시의 해결 노력 필요
- 마포구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이어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마포구 및 고양시의 반발이 크다는 의견
- 국토교통부가 K-패스 정책 발표 전날 서울특별시에 통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 서울특별시가 기후동행카드 정책 발표 4일 전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관련 회의요청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



- 기후동행카드 정책 지원금(1인당 65,000원)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
- 각종 민간개발사업에 서울특별시장의 관여 정도를 최소화할 필요
-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하여 인력을 줄여서 충원율이 높아진 상황에 대해 노력 필요
-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의 적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필요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서울에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지하철도사업 추진 계획이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
- 서울특별시 내 부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조치 필요
- 뉴스타파에 대해 등록 기준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기후동행카드가 서울 권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
- GTX-D 노선 진척 사항 지연에 대한 지적
- 올 겨울에 한파나 대설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액으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

한 대책이 필요

-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정책에 대한 재고 필요
- 서울지하철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인한 대책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
- 기관증인 중 여성관리자의 비중이 적다는 지적
- 대관람차,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 서울혁신파크 복합 개발 등의 지속적 추진 가능 여부 질의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체납된 지방세가 1,111억원에 해당한다는 지적
- SH공사 퇴직자가 관련 용역 계약 업체에 근무하는 등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
- 서울 강북 동북권에 추진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이 진척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TBS 지원액 삭감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청취율 하락으로 수익이 저하되었다는 지적
-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진 등 재난대비 부족 의견
- 반지하 건축허가 일괄제한에 대한 우려 의견

-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관련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 조속 실시 필요
- 기억의 터 내 작품 철거가 성급했다는 지적
- 키즈 오케이존이 오히려 노키즈존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견
-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장비 부족 지적 및 장비보관계획 수립 필요
-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기업에 대한 혜택성 답례품은 재고의 여지 필요
-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
-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지방세수의 변동이 생기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보전할 필요
- 육안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
- 기후동행카드가 생활행정의 표본이라는 의견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성폭력 사건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다는 지적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배차간격이 길다는 의견, 마을버스의 할인 및 무료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 서울특별시 버스정류장 내 노선도 관리 상태가 아쉽다는 지적
- 청년안심주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입주 포기 시 위약금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는 지적

-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관용 부분을 제고할 필요

## 나. 대구광역시

-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
- 집회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지적
- 대구광역시가 관련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과 합의한 구미 해평취수장이 아닌 안동댐을 신규 취수원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예상 사업 비용 및 취수원의 수질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검토 필요
-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공원인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위령탑 명칭을 추모공원의 성격에 맞게 현행 ‘안전상징조형물’에서 ‘추모공원 위령탑’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광역시 중 최하인 수준인 대구광역시의 경제발전 방안 및 시 재정의 건전 재정 달성 방안 마련 필요
- 현임 시장 재임시기에 전임 시장의 정책에 대해 정책변화 속도가 너무 빠

르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감소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

-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 자치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자치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화지역으로 육성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 차원의 피해보상 방안 마련 필요
- 대구광역시의 신청사 건립 재원은 건전재정을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조달 필요
- 권영진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대금 2,400억 중 1,400억을 코로나 대응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
- 시민들의 재난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난예비비의 낮은 집행률 개선 필요
-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방 조직의 정책·예산에 대한 시 차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
-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돌봄 정책을 대구광역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과거 피해 발생 지역이 아닌 위험지역도 대구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대구광역시의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 기업·대학의 유기적인 연합체 구성 필요
- 전년도 수준의 여성 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필요
-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업인 ‘두류젊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시비도 투입예정이므로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 필요

#### 다. 인천광역시

-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확충 필요성
- 지하철도 침수로 인한 사고 예방 관련
  - 지하철도 침수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침수에 대비한 지하철도 차단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 필요
- 북항해저터널 내 대형사고·화재에 대비한 양방향 구조차 도입 필요
- 초고층 건축물이 밀집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특별한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
- 공공병상,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 인천시민의 보편적 의료이용권 보장을 위해 인천의료원 인력 공백 해결 필요

-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적극적 추진 필요
- 정당 현수막 관련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적절성 및 시민들의 평가에 대한 질의
- 인천광역시 신청사 매입 과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취지 질의 및 시민 동의를 통한 개편 필요성
-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 편익과 공익을 우선으로 한 개발사업 진행 필요
- 송도 K-pop 콘텐츠시티 사업 백지화와 관련하여 시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절차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 국비 지원 필요성 여부 질의
  -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 및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질의
- 수도권 매립지 관련
  - 4자합의의 선제적 조치, 2026년도 직매립 금지 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자체 매립지 용도로 매입한 부지의 부적절성 및 활용 방안 질의
  -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과제로 중앙정부의 해결책 제시 필요

- 인천의 쓰레기 매립장, 발전소 입지·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기대 수익 요구 필요
- 인천광역시 균형 발전을 위한 구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전략 필요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균형 발전 고려 필요
-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찬반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추진 필요
-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관련 2027년 정상 개통 추진 필요
- 청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관련
  - 외국투자 기업 발굴 모색 및 LH와 협력 강화 필요
  - LH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나서서 투자유치,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
- 전세 사기 피해 관련
  -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실집행 부진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
  - 전세 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축소 여부
-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액 및 평균속도를 고려하여 통행료 문제



해결(무료화)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대책 및 방사능 기준 초과 수산물 유입 여부 질의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종합대책 및 인천의 수산물 안전을 위한 해역 방사능 자체 조사 시스템 마련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낮으므로 관련 사업에 관심 필요
-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인도적 지원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 모니터링이 어려우므로 효과성을 검토하여 신중한 진행 필요
-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이동식 수조 도입 및 전문적인 소방 교육 필요
- 언론사 및 대학 학보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 검토 및 광고비 집행 관련 기준 강화 필요
- 지역언론 지원 사업 관련 결격 언론사 선정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절성 확인 필요
- 특정 시민단체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위법 운영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 등 조치 여부 및 환수 결정 금액의 적절성 여부 질의
- 재난·재해 대비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필요
-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 부실 시공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인

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준수 여부 검토 필요

- 인천 검단 아파트 우중타설 및 부실공사 관련 민원이 많은바, 준공승인 전 철저한 점검과 부실공사 여부 확인 필요
- 검단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필요
- 함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감시·감독 필요
-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중소기업의 타격에 대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사모펀드의 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정부의 상용차 중심 수소 전환 정책방향 및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선도 도시 조성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의 과감한 지원 필요
- 청라 주민들의 대통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교통대책 TF를 즉시 가동할 필요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버스노선 신설과 운행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축소 등 버스교통 서비스 개선 필요
-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확대 필요성
- 여성 고위 공직자 비율 확대 필요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경기패스 추진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 계획 질의

-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와 시민의 교통비 감면을 위한 정책 필요
- 인천광역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 필요
- 자치구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서 대형 상권지역의 주정차 기준을 정할 필요
-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설치계획 질의
- 공공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 보장 필요
-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헌 판결과 관련하여, 현재 결정 취지를 살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지방세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필요
-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 필요
-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방지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 필요
- 인천광역시 조례에 공무원 직장 갑질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

- 연수구의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근무자 투신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 및 행정처분 고려 필요
-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의 주변 환경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상풍력발전 추진 시 생태환경 영향 적극 고려 필요
-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수소발전소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다른 부지에 먼저 설치하여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 필요
- 특별회계 예비비의 「지방재정법」 상한 비율(1%) 준수 및 재난예비의 일반회계 분산 편성 필요성
-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가 면제되도록 국세청에 적극적 조치 필요
- 연수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추진 중 백지화 관련, 연수구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관련 의견 전달 및 인천광역시의 동의 여부, 인천광역시의 실태파악 또는 교부금 환수대책 마련 여부, 연수구 행정에 대한 감사 필요성 여부 질의
-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 이전 국정감사에서의 특혜 의혹, 환지 분양 방식으로 진행 시 민간 이득 제한, 그린벨트 해제 시 대체 지정, 타당성조사 재 실시 여부 등 질의

- 인천시민 및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보급량 확대 필요

## 라. 경기도

- 양평-서울고속도로 사업 논란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원안과 대안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
- 경기도의 적극재정 기조와 달리 전체 예산 대비 재난안전 분야 예산 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인 6.8%보다 낮다는 지적
- 양평-서울고속도로 사업은 B/C 논쟁보다 당초 사업 목적에 충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 경기도가 양평-서울고속도로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
- 평택 포승지구 내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에 일본 기업을 유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기업 유치를 비판한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
-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특별자치를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는 의견
- 경기북부지사를 다음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일정을 서둘러 행안부와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

- 경기북부특별법 추진 시 경기북부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접경지역·그린벨트의 해제권한 등을 가지고 K-칩스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기도가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에 동의했고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감사관실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
- 도지사가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관계,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관한 발언한 내용은 정치적이므로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
- 국토부가 경기도를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1차 협의에서 제외하고 원안의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을 삭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국가가 일본 소부장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것과 지자체 단체장이 일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의견
-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변경안의 변경 비율이 55%이므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며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2차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국토부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 변경안을 주장하는 근거는 경기도의 균형발전 및 조속한 건설 가능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 경기도가 국비를 5년간 65조원으로 가장 많이 확보했음에도 반납액이 5년간 1조 8,456억원으로 가장 많다는 지적
- 고속도로 등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
- 경기도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결과 개발부담금 면제 혐의가 제외되고 장모 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질의
-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협의 기본방향 의결과 같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기초지자체의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가입을 거부할 경우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 경기도 내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대응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 필요
-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동균 전 군수가 양평고속도로 계획 발표 이후

고속도로 부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에 대해 질의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 먹거리 5개년 계획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질의
- 경기교통공사는 철도운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철도를 운영하지 못하며, 인사행정이 미흡하며, 경영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예산 집행률도 낮음에도 경기도지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이 수사 도중 승진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의
- 360도 돌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
- 행안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TF를 설치한 것에 대한 의견 질의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한다는 의견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및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
-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



- 추후 경기북도가 지방교부세를 받으면서 발생 가능한 재원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
- 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영화 괴물의 화학약품 방류에 빗대어 발언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 마약류 처분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법률 상담서비스와 심리상담 등 정서적 지원조치를 제공할 필요
- 돌봄 과정이 시혜적 복지가 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
-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동물 화장장, 추모시설 등이 혐오시설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측근 자녀가 성남산업진흥원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
-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유기견 관리업무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에 대한 지적
- 여주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국고 손실이 발생했지만,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도비 투입금을 줄였다고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검찰의 경기도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질의

- 지역화폐사업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질의
- 경기북부·남부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앞 보행로 없는 도로의 안전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시 경기도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할 필요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후도시 조성 및 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정치행위를 자제하도록 도지사가 관리할 필요
- 기본소득위원회를 취임 이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의
- 경기도가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
-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높은 재정 결손이 예상되므로,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만이라도 국세 감소를 그대로 결산 감액을 하지 않고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할 필요
-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수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

- 도지사가 성장률 저하 및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개진할 필요
- 버스준공영제 정책 파기로 인한 버스노조 파업에 관한 사항 지적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화재가 발생한 경인고속도로 터널과 유사한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방세 감소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 여부 질의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하라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양시 관산 및 고양 119지역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할 필요
-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도비 지원 보조율 변경 사유에 대해 질의
-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에 있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 이태원 참사 이후 경기도의 안전대책 추진 대책에 대해 질의

- 경기도 선감학원 진상규명 피해지원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 불법촬영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
- 2022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세 체납액 1위를 차지하였으므로, 활용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엄정하게 추심할 필요
- 소속 공무원의 비위문제, 산하기관 갑질 의혹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 2022년 경기도의 과오납 세금이 약 4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청소년들의 여가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 경기도 내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 **마. 충청남도**

- 다른 시·도의 폐기물 반입에 부과하는 반입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

하는 의안번호 212135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추가확장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재검토 필요
- 소 립피스킨병 확산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필요
- 태안군 풍력발전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추진할 필요
- 태안군 태양열발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필요
- 화력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협의할 필요
- 재난 담당 공무원의 인력 증원 및 과도한 초과근무 감축에 관심을 가질 필요
- 충남 지역 장애인 콜택시 중 7년 이상 운행된 노후 차량 교체를 추진할 필요
- 정부의 지방교부세 불용 등에 대응하여 재방재정을 보강할 수 있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충남 북부와 남부 간의 경제 격차 및 재난대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

## 바. 전라북도

- 군산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무담보 대출 및 빚 보증에 따른 전라북도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감사 등 필요
-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의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프로축구 구단 전북현대모터스 외 도내 다른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노력 필요
- 전라북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점검 필요
- 전라북도 소방본부 고위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부실징계 의혹에 관한 질의
- 최근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급증했음에도 관리가 미비하므로, 정기 점검, 실태조사, 표지판 설치 확대 등 대책 필요
-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 평균시간, 소방관 1인당 담당면적, 소방장비 현황 등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소방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실한 편이므로 소방력 강화 필요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 재정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
- ‘전주시 빌라 생활고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할 필요
-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주민의 안전 및 범죄 등 우려가 있는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 전라북도의 결식아동 급식비(8천원)를 현실적인 외식비 수준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
- 도내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이송수단보급, 교통비 지원 등 대책마련 필요
- 2023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은 잼버리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는 조직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에 있다는 지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유사하게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국제행사이므로,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세부

분야별 문제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라북도에서 담당한 기반시설이 아닌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한 운영시설이었다는 지적
-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파견될 경우 조직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되므로, 도지사의 관여는 불가능하다는 지적
-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대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 현황, 잼버리 행사 준비상황 점검 등 도지사의 활동내역, 관계 법령상 잼버리 집행위원장의 권한 등에 비추어 2023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다는 지적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전체 계약의 약 30%가 대회를 한 달 앞두고 급히 체결됐으며, 잼버리 백서 발간을 전북도청 입점 문구점이 맡는 등 수의계약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전라북도 차원의 진상·원인규명 노력 필요
- 2023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도지사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책무를 지니므로, 집행위원장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2023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
- 조직위원회와 정부에 2023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도지사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사업 예산액이 대폭 삭감된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지적
-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사업 예산액이 대폭 삭감된 것은 보복성 삭감으로서 전라북도에 2023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
- 이전까지의 경향과 달리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사업 예산액이 대폭 삭감된 것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예산편성 행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민생을 중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기조대로라면 삭감된 새만금사업 예산액을 원상회복시킬 필요
- 새만금사업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
- 2023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에 새만금사업 관련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살필 필요
-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보복성 삭감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부족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

#### **사. 강원특별자치도**

-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현실과 동떨

어진 검사로 판단되고 전시행정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수산물 방사능검사 관련 2024년 예산에 장비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
- 산불 중 골프를 쳤다는 보도에 대해 기사를 고발하는 것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소송인지에 대한 의견
- 산불대책기간에는 골프를 치는 것 등을 공직자로서 주의할 필요
- 언론사에서 악의적인 제목의 보도를 의도적으로 이어갈 시 가짜뉴스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
- 강원개발공사 소유 알펜시아리조트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견
- 전임 지사와 KH그룹과의 관련성을 현 지사가 법률가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강원연구원장 취임 후 아침공부포럼이 이념논쟁이 있으므로 도민을 위해 일하는 분으로 원장을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현 도지사를 지지하지 않는 도민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
- 2019년, 2020년, 2023년 산불로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혹한기까지 난방비, 전기료 지원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여 자치권이 많이 미흡하므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점검 필요
- 전임 지사의 레고랜드, 알펜시아 매각 등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손해가 많다는 의견
- 현 지사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전히 산불피해가 큰 데 비해 산불진화헬기 운용과 관련하여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 민생, 불황, 소비 감소, 수출 감소 등으로 지방채 등을 발행하여 확대 재정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평균보다 아래라는 지적 및 이에 대한 변화 모색 필요
- 여성가족부 예산 대폭 축소로 인한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축소 관련 문제는 관련 직원 등의 의견 경청 필요
- 국비감소가 되었다고 해서 여성권익분야 예산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
-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도지사가 골프를 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강원연구원장의 편향된 인사를 강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도지사가 주의를 줄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관련 강원연구원 연구용역의 과업기한이 목적과 맞지 않다는 의견
- 전임 도지사의 UAM 관련 액화수소 드론택시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 등 성역 없이 조치할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특화사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전환시킬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을 위해 에너지 분야 등에서 부당한 규제를 감당해 왔고 더 이상의 지역희생을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운영을 중단해야 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발전소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예정이니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강원특별자치도는 1인가구 및 고령인구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이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
-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사태 다발 지역이 많은 데 비해 이를 대비할 예산이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 필요

## 8. 공공기관

###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의 실질적인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무를 강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개방된 공공데이터 수에 비해 품질이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에 대해 질의

###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공단의 부실 점검 및 불성실한 감사결과 이행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질의
- 승강기 정기점검 제도 시스템 정비에 대한 의견 질의
- 주차타워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실제 제조과정에서 불법성을 밝힐 수 있는 조사 권한과 안전인증취소에 대한 제도적 방침에 대해 질의

###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 단체 및 심사위원 선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지적

- 민주주의연구소 발간 정기간행물, 학술대회 내용의 편향성 및 쇄신 필요성 지적
- 미정리사료 등록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 비율 개선이 미진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동 사업 업무 위탁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사업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필요
- (가칭)‘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추진될 필요
- 주한미군 철수 운동 등을 주도하는 단체들에 ‘한국 민주주의 대상’을 수여하는 등 정치편향적 활동을 지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사업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상화 필요

####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해법의 적절성 여부 및 기금 마련 방안  
에 대한 대책
-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방침에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주요하게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우키시마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유해 280위의 국내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 동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배상 방식이 아닌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
- ‘공탁금 관련 법률자문 내역 및 자문요청서, 결과보고서’ 제출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으며,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한 불수리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재단의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질의

#### **마.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5년간 연 1회 단속으로 부정입주자가 48세대 적발되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응계획 질의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심사 및 선정 과정의 부적정에 대해 질의
- 개포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향후 주변 단지의 전·월세 시세 하락 등 여건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운영·관리 필요

#### **바. 도로교통공단**

- 교통방송 난청지역 해소방안 제출 필요
- 콜센터 상담원 휴게시간을 최소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여 상담원 보호 위해 노력하고, 상담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처우 개선 필요

○ TBN 방송 사장 선발 채점 심사 기준을 정비하여 보고 필요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마약 전과자를 포함하도록 경찰청과 논의 필요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가. 서울경찰청

- 전광훈 목사의 역사왜곡 발언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 필요
-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대처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도 지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따른 지휘 책임 또는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질 필요
- 전장연 집회 관련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
- 서울의 강력범죄 비율이 높으므로 마약범죄 수사 전담팀과 같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 필요
- 시청역에서 진행되는 평화로운 종교집회(월요시국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전세사기 규모가 커지며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처리 및 HUG 보증 등 가짜 계약서 관련 홍보 등 예방 필요
- 특별치안활동 중에 13명의 경찰관들이 비위를 이유로 감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시민들에 대한 사과 필요
- YTN 직원에 대해 과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한 수사 필요

- MBC 전 사장에 대한 횡령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 수사 필요
-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유튜버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
- 경찰 내부 갑질 사건 감찰 조사 관련,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성평등 관점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
- 다른 청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청 지구대·파출소 요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필요
- 구속 결정은 신중한 판단 사항임에도 긴급체포 후 영장을 받지 못하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개선 필요
- 서울 관내 파출소 중 6곳이 총기를 미보유한 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 필요
-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강화방안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위험성이 증가함에도 가해자 구속률이 낮은바, 개선 방안 필요
- 공무집행방해사범 및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일부는 주취자에 의해 발생, 주취폭력과의 전쟁 등 강력한 대책 필요
- 경찰이 1인시위를 마친 시민단체 대표의 뒤를 따라가는 등 개인사찰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관계 보고 필요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 묻지마 범죄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휘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필요
- 택시기사 분신 사망 관련 유가족에게 사체포기각서를 요구했는지, 업체와 유족을 대함에 있어 형평성 유지 등 공정한 수사 필요
- 영등포 경찰서의 필로폰 밀반입 다국적 마약조직 검거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첩이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해 과잉·불법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관련 내용 파악하여 공정한 수사 필요
- 선거 관련 인터넷 언론매체의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바, 엄정한 단속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행 시간대별로 탄력적 단속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
- 지하철 내 성범죄가 급증하나 미제사건은 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찰 인력 운영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대사관에 항의 서한문 전달 시 경찰이 제지하였는데,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지 검토 필요
- 김어준 사건 수사를 불송치했는데 공정한 수사였는지, 허위사실 유포 사건 등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 필요
- 이태원 유가족 집회 시 물품 확인 등 과잉 대응 아니었는지 확인 필요
- 언론인 사건은 신중·신속히 수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MBC 기자 사건 등 신속한 수사 필요
- 의료용 마약 관련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식약처와의 협의 필요
-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직전 발생한 폭력·손괴 등 피해에 대해 체크리스트에서 ‘낮음’ 단계로 평가했는데, 적극적인 법 해석 등 보호 조치 필요

## 나. 대구경찰청

- 전국 시도청 가운데 대구가 사업용 차량 사고 상위 4위에 해당하는바, 사업용 차량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위한 도로체계 점검 필요
- 경장, 순경 현원이 정원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젊은 공직자들의 조기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계급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
- 대구시청 압수·수색 관련, 6월 압수·수색 후 현재까지 사건처리가 지연

되고 있으므로, 신중히 수사하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결론 필요

- 수사준칙상 피의자 미출석 조사 종결(우편·전자우편·전화 등) 규정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교통안전 위협 및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이륜차 폭주행위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보호구역 시설 정비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총경 이상 여성 경찰관이 없는데 유능한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에 균형 잡힌 인사 필요
- 퀴어축제 당시 경찰과 시청의 충돌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입장을 고려한 경찰행정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 전체 경무관의 3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공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순경출신, 여성경찰관을 발탁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
-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 지연 우려,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공정한 수사 필요
- 지난해 대비 징계 건수 증가 및 각종 비위 사건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장의 집회 방해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 필요

- '24. 1. 1. 경북 군위경찰서 대구경찰청 편입 대비 철저한 준비 필요
- 자율방범대는 가장 중요한 치안 보조 단체임에도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므로 자율방범대 협업 강화 필요

#### **다. 인천경찰청**

- 인천부평경찰서 신축공사의 신속한 추진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구간에서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오단속 건에 대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
- 조직개편에 따라 외사 기능이 폐지되는데, 인천은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늘고 있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사 기능 강화할 필요
-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국제기구도 있는 등 중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송도경찰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 스토킹 접수 건 대비 안전조치 비율이 낮는데,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이 계속 적발되는데 경찰이 적극 개입하여 예방할 필요

-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합동 항공보안 특별점검 시 인천공항에서 모의테스트 폭발물 2개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인천공항에서 경찰의 대테러 체계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할 필요
- 집회·시위 개최시 대화경찰관의 적극 활용 필요
- 총경 정년퇴직 시 시·도경찰청 과장급이 아니라 기관장인 경찰서장으로서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인사주기를 조정하는 등 예우 필요
-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 시 국토교통부 행정정보를 참고하는 등 적극 수사·대처할 필요
- 학교 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학교 수가 늘면서 SPO 1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도 전국 평균을 넘는 실정으로 SPO 인력 증원 필요
- 인천강화경찰서 독신자 숙소 노후화 고려 신축 추진할 필요
- MBI 금융투자 사기 사건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분리 수사 중인데, 신속히 기초수사를 마친 뒤 한 곳에서 통합수사할 필요
- 행정규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비 필요
- 섬 지역의 지역관서는 노후화가 심하고 순찰차도 없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개선할 필요
- 아동학대 신고 건수, 검거율을 토대로 보면 APO를 확대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은 객관적 치안 데이터가 안전한 편이라고 하나 매년 체감안전도 순위가 최저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살펴보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최다 검출되고, ‘나비약’이 청소년 사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등 심각성을 고려하여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 필요
- 인천강화경찰서 가정폭력 뇌사사건(일명 ‘테니스남’ 사건) 관련, 철저한 후속조치 필요
- 초등학교 인근 화물차 통행제한 확대, 보도와 차도 미분리 등 어린이 안전을 해치는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필 필요
- 최근 신종 수법의 신생아 매매 사건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적극 대응 필요

## **라. 경기남부경찰청**

- 전세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하려면 수사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사건 배당을 줄이고, 사건처리 시 혜택을 주는 등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격려 방안 필요
-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필요
-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MZ 조폭들에 의한 피



해 우려가 크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파출소 등 주민들과 밀착하여 지역을 챙기는 경찰 활동이 범죄예방에 적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자치경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조직, 인력, 권한 등의 분리가 필요하므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전세사기 수사 관련, 사기의 고의성이나 의도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수사할 필요
- 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자율방범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협력을 통해 치안 관련 문제를 해소할 필요
-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장부터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자질을 갖추고, 서장 등도 수사지휘 역량을 갖추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 교통안전 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고, 통학로 주변 공사 문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선도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교통단속 장비 불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문제가 많은 곳은 관할 서장과 함께 현장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을 찾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

- 수원역 디스코광광 사건 관련, 업주 등 일당을 검거한 데서 경찰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을 구매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필요
-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
-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살인예고글을 예방하고 추적·검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대응할 필요
- 변화가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파출소를 두고 맞춤형 치안 활동을 전개할 필요
- 경기도 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SPO 인력 증원 필요
-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늘고 있으므로 킥보드 사고예방 대책 마련 필요
-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와 재산 몰수에 중점을 두고, 경기남부의 재산 몰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
- 북한발 사이버 공격 관련 용역업체를 통해 직원들의 연락처가 외부 유

출되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속히 수사할 필요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기도에서 자체감사 이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는데 수사 결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만으로 송치한 것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 대통령 장모 수사와 관련하여 한 차례 서면조사로 끝내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는 등 국민이 경찰 수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정하게 수사할 필요
- 경기도의 넓은 관할 면적과 증가하는 인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가 치안센터를 활용하고 상주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 이재명 대표 관련 부실수사로 경찰의 수사 의지·능력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으며, 재수사를 통해 이전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
-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지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
- 음주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감치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감치명령 제도를 철저히 활용할 필요

-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검찰 수사 예를 참조하여 수사할 필요
- 경기남부청 지하철 경찰대의 근무 인원이 적어 지하철역 치안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대통령 장모 서면조사 관련, 국민들은 경찰에 서면조사나 전화조사, 이메일 조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경찰에서 수사 대상을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수사할 필요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인허가 비리와 사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필요

#### **마. 경기북부경찰청**

- 의정부 흥기소지 의심 112신고 처리 중 상해사건 관련, 경찰이 국민을 보호해 주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자율방범대가 단순히 봉사하는 협력단체가 아닌 경찰과 상호소통하여 협력을 이끄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수사지휘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한 지휘부의 관심 필요
- 기자들이 정장 선물을 받아간 사건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 괴담에 대한 엄격한 수사 필요
- 경기북부청의 인력 감축 규모가 타 경찰청에 비해 크므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

- 당근마켓-네이버 직거래 사기 방지 협업(경기남부경찰청 시행 중) 검토 필요
-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SPO 인력 증원 필요
- 청소년의 키보드 이용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필요
- 전세사기 수사 관련, 신속한 수사 및 재산 몰수 필요
- 경찰청에서는 치안센터 폐지 기조로 가고 있으나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치안센터를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친근함을 느끼는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바. 충청남도경찰청**

- 청소년 강력범죄가 흉폭화되고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
- 충남경찰청 경찰차량의 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액이 많으므로 내부적으로 기강 확립 필요
-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해 감치명령 등 적극행정을 할 필요

- 다이어트 약을 다량으로 처방받아 유통하는 사례 등의 예방을 위해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력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1인 가구가 많은 충청남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인력 충원 필요
-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쇼핑몰 구매 관련 신종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매년 천안지역 폭주족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바, 대책 마련 필요
- 충남의 노인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아 자치경찰위원회 및 지자체와의 협조 필요
- 지난 3년간 충남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 필요
- 조직재편을 통해 과학수사과와 형사과 통폐합되는데, 과학수사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
- 주취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센터 상주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천안 동남경찰서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MZ 조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 필요

- 장기미제 사건 해결 등에 과학수사가 중요하므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과학수사 분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 필요
- 당진 현대제철 사내에서 발생한 피케팅 시위와 관련하여 국민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권력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신경쓸 필요
- 계룡시 임대아파트 사건, 보령축협사건 등 서민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
-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상설 수사에 더욱 노력할 필요

## 사. 전라북도경찰청

-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영리행위·수사 대상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과 관련하여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전북은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 2위이고, 고령화에 따라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전북청 수사관에 대한 제척 등 피의자에 의한 수사관 교체 요구가 높은 편이므로 제도적 개선 필요
- 전북청 영장 기각율이 높은 편인바, 기본권보장 미흡으로 보일 수 있

고, 경찰 수사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현장 근무자들이 응급입원 업무 외의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경찰 업무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발생이 우려됨에도 마 음동행센터 근무자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인력을 증원할 필요
- 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경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심리지원·마음돌 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 필요
- 스톱킹처벌법 처리결과 구속률이 저조하므로, 온정적 대응이 아닌 구 속 수사 등 강력한 대응 필요
- 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관련 서민과 청년층 보호를 위해 사기범죄에 적 극적인 대처 필요
- 장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과잉 경호가 되지 않도록 관련 경호규칙에 따라 대처할 필요
-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 미납 공소시효 만료가 많은바 미납금 관리 대 책 필요
- 2018년부터소방차량 과태료 면제요청 시 요구되는 서류나 요건을 간소 화하였는바, 불필요한 서류 추가요구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
-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은 2~30대가 대부분인데, 전북은 60대가 38%를



차지하는 통계와 관련하여 마약사범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역경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관심과 개선 필요
- 등록대상 성범죄자들이 모여사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아. 강원경찰청**

-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 활용 필요
- 강원도는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바, 새로 창설된 경찰 특공대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
- 치안수요가 많은 변화가에 상시 파출소 운영 및 지역경찰에 대한 인사·승진 인센티브 등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건설노조원 분신 사건 관련 수사과정에 대한 공식 조사 여부 및 무리한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
-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12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지구대·파출소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데에 관심 필요

- 양양군 ‘플라이 강원’ 공사 관련 군수가 위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 강원도의 환경에 맞추어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올릴 수 있도록 폐지 예정 치안센터 등에 자율방범대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 마약 투약 경찰관 관련 자체 감찰조사 실시 등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 필요
-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문제 관련, 경찰 스스로 기간을 두고 마약검사를 하는 등 경찰 차원의 제도 개선·보완 방안 마련 필요
- 경찰조직의 통합과 안정화를 위해 업무 능력 기준 인사 평가로 순경·경사 출신, 여성 경찰관에 대한 배려 필요
- 강원경찰청 정보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보 수집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휘감독 필요
- 강원도의 성공적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다른 청에서 벤치마킹하도록 할 필요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수의계약을 통한 무자격 업체의 울타리 시공문제에 대해 적극 수사 필요
- 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 개최 관련 경찰서장 등 지휘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중앙협의회의 직원 수가 전체 회원수 대비 매우 적은 것에 대해 실제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지 여부 질의
- 수익사업이 전무하고 국고보조사업비는 운영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
- 3년간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국민운동단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

#### **차. 새마을운동중앙회**

#### **카. 한국자유총연맹**

-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게 된 기본적인 경위에 대한 질의
- 정치적 중립 조항 재삽입에 대한 검토 필요

## VI.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 행정안전부

【대변인】

【기획조정실】

【의정관】

【감사관】

○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인사기획관】

【운영지원과】

【디지털정부실】

○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 본인정보 전송 오류 감소 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것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시 공지방식을 개선할 것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발주처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행정안전부 소관 출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혁신조직국】

- 대한행정사회 내 민주적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향후 대한행정사회에 대한 감독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 비교과 교사 법정 정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행정안전부는 전자장치 감독 인력의 증원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각 부처의 공용차량 이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 온나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탐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구급차·소방차·경찰차의 앞자리 번호로 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시키는 제도가 노후화된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 및 다른 국가기관으로의 확산 방안을 마련할 것
- 스토킹 처벌법 시행 관련 전자장치 모니터링 요원 인원을 확보할 것

### 【경찰국】

- 자치경찰의 이원화 등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순경 출신 30% 이상을 경무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하여 로드맵을 세워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것

## 【지방행정국】

- 현재 건립 중인 ‘민주인권기념관’의 명칭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에 따른 법상 명칭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정정할 것
- 국고보조를 받는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한국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 등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활동에 이념편향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감독권을 활용하여 개선할 것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콘텐츠가 편향적으로 제작·전시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우키시마호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남아 있는 유해 280위의 국내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선감학원 2차 매장 추정지에서 발굴된 분묘들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예산 수립 및 추가 발굴 지원,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 트라우마센터는 국립시설로 지방비 50% 매칭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 제주4·3사건 보상금 2023년도 예산 1,810억원 중 3분의 1인 626억이 지급된 상황이므로 원활한 보상금 집행을 위하여 보상분과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할 것
- 제주4·3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4명은 전문가들이므로 분과위원회에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선감학원 유해발굴과 유해 안치 및 추모공간 조성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선감학원 아동인권 학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등 국가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부정 사용시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
-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 전국 직장 내 갑질 실태 점검 및 전국 시·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할 것

## 【자치분권국】

-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를 철저히 보완할 것

- 모바일주민등록증의 보편화를 위해 최초 발급 시 발급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인력 및 기능 재배치를 통해 위기가구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증진한 사례 및 이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통장의 기본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회의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반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지방 간부공무원 장기교육훈련 교육 인원 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 선발 대상을 확대할 것
- 50만 이상 지자체 실·국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장기 임용대기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대구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본부장과 과장급 사이의 중간 직위 설정 등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급 조정 문제에 대해 조속하게 조치할 것
- 소방관 PTSD·우울증 정신건강 치료관리 필요군이 70%, 10만명 당 자



살 통계도 31.2명에 달하나 휴식과 치료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므로 소방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방재안전직 공무원 수가 791명에 불과하여 업무 과중으로 퇴직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균형발전지원국】

- 고속도로 등 도로변에 게시된 옥외광고물, 광고물 게시를 위해 건축된 가건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 등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민간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것
- 옥외광고 관련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지방재정경제실】

- 집회·시위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635호)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관계 기관 설득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위법·부당하게 교부·사용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지방재정 운용 문제 대처를 위해 보통교부세 추가 지급의 합리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감독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가 불가한 체납지방세액이 상당하므로, 시효 중단, 재산추적 등 조치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할 것
- 지방 공공기관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는 지방교부세 기준연도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의 대안 및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10대 혁신과제 중 “조직문화 및 경영관행 혁신” 과제에 갑질 문화·불이익조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혁신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보고할 것
- 착한가격업소 관리·감독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특정 집단이 지자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대한 운용 현황을 파악할 것
- 직장 내 괴롭힘을 내부고발한 지역금고 직원에 대한 면직처분 과정에서 허위진술 강요 등이 있었음이 드러나 면직취소 및 복직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중앙회에서 사변부여를 하지 않아 해당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안전감찰담당관】**

#### **【안전예방정책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조치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를 독려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 추진할 것
- CCTV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교체주기, 화질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승강기 자체점검의 기준을 정비할 것

- 노후 승강기 안전장치 교체에 대한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재난안전통신망의 기관 활용이 저조하며, 정기교신 훈련 응답률 또한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및 내실화 필요
- 이태원 참사 원인의 정확한 분석, 책임지려는 자세, 피해자 중심주의를 통하여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 서버 용량 부족으로 CCTV 화소 수준을 임의로 낮추어 운용하고 있는 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승강기 수리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 **【자연재난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선정 시 재난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자체가 재난 예방·대비를 포함한 재난관리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활용지침 정리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홍수위험지도 등을 활용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방재매뉴얼 시스템을 정비할 것

- 선제적 재난 예방대책으로 안전대피시설 구축 및 지하차도 위험등급 기준을 개선할 것

## **【사회재난실】**

### **【재난복구지원국】**

-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채용비리에 대하여 사무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것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약 비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의결 없이 사무총장이 전결 결재한 것이 5년간 7만 8,000건, 592억원으로 파악되는 바, 행정안전부가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을 것
-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재민 임시주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필요사항을 보고할 것
- 재해구호협회 채용비리 관련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 **【비상대비정책국】**

- 민방위 대피시설이 대도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대피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헌혈자의 민방위 훈련시간 인정을 확대할 것
- 산사태 공동대피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비상대비정책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국가기록원】

- 전문적 복구 프로세스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통해 중요 전자기록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장기보존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기록물 생산시스템에서 손상된 상태로 이관되는 전자기록물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담당부서와 국가기록원이 다년간 협의한 결과를 제출할 것
-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전자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정보자산이 얼마나 소실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 【정부청사관리본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대통령기록관】

## 【이북5도위원회】

- 이북5도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고, 명예시장 등을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폐지할 것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사무총장 임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형태로 표시하고 바코드 표시가 어렵다면 절취선을 만들어 일련번호를 표기할 것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유 중인 전체 전산망에 대해 보안 점검을 실시할 것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독점적 인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예산 확보 방안 및 투·개표 사무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투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전투표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 사전투표·개표 장비 관련 예산의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무위원,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선거제도 및 투표절차 개선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의 선거제도 연구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제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선거보전비용 미반환금액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투표지 보관장소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의 홍보물·발언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재의 전자식·기계식 개표방식에 수개표 절차를 보완하는 등 개표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서 외의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바, 시정할 것
- 인민군과 좌익 세력에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2021년 4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군인, 경찰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경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편견과 선입견, 명예훼손이 우려되고, 학살 주체가 우리 군경에서 인민군·좌익으로 변경된 사례가 다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내부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같은 행정기관의 감사부서가 아닌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에 외부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과 국정감사 기간 중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조속히 결정할 것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이 확정된 부역자가 아닌 재판 없이 즉결처분 당한 부역 혐의자의 부역 여부에 대해 조사·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따라 그러한 사건의 불법성을 밝혀 진실규명 결정을 할 것
- 삼청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강제징집,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이미 진실규명이 된 사건들에 대한 원활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직권조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력 보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과 다른 기준으로 사건을 심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쟁 전후 국방경비법 등 적용실태 연구」 용역보고서의 권고를 조사와 결정문 작성에 참고하겠다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입장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해발굴 사업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 조직 역량을 기관 설립 목적인 조사에 투입할 것

#### **4.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국】**

-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공무원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검토할 것

- 공무원이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짧은 순환보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인사관리국】

- 보수 수준 상향 등 높은 청년 공무원 퇴직률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지급시기 불일치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 【윤리복무국】

-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의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재해보상정책관】

- 공무원마음건강센터 확충에 대해 검토할 것
- 순직 공무원이 사후에 추서되는 경우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연금 등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시중 간병비를 고려해 경찰·소방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간병비를 인상하고, 화상 등 상해 정도에 따른 간병비 지급기준을 완화할 것
-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 지급 기준과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자살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순직 심의 시 교육직 공무원 참석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5. 경찰청

-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안보수사 인력 전문화 및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가정폭력 사건에서 위험성 조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64%에 불과한바, 어떤 기준에 따라 위험성 조사 없이 현장 종결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보고할 것
-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것
-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에 관하여 수사할 것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
-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최근 조직개편안 중 수사심사관을 폐지하는 내용을 재검토할 것
- 저위험 권총의 안전성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도입 계획을 재검토할 것
-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대한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전국 259개 경찰서의 치안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각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

- 권총 구매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할 것
- 이상동기 범죄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
- 故 표예림 사건 등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대학 졸업생이 로스쿨 진학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과 훈련에 대해 상세한 매뉴얼·기준을 마련하고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훈련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열심히 일한 경찰관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포상할 것은 제대로 포상하는 등 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
- 구인·구직사이트에 업로드된 이력서를 범죄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 그 안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도피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터폴 및 국제적 공조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등 지휘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집회·시위 시 소음기준 및 차량의 인도 침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경찰청이 9.21.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는 없는지 재검토할 것
- 라임사태 자금이 흘러간 필리핀 불법카지노 사건의 핵심 인물을 둘러싸고 수상한 자금흐름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 수사에 나설 것
- 마약사범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시적성검사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심각하므로 불법행위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폭력시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치안 센터를 자율방범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민간행사 경비에 기동대를 동원할 경우 해외 사례와 같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세종과 제주에 형사기동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간이시약기로는 신종 마약 검출이 어렵고 오류가 존재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식약처와 공조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청 차장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회의 참석 실적이 저조한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것
- 범죄 진압·예방 등 경찰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 체력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경찰관 채용 시 체력검정 반영 비율을 높일 것
-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 공상경찰관 지원(요양급여, 간병비 등)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 화재감식요원 등 일선 경찰관이 공상추정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 범죄에 대한 수사력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 조폭 유투버 등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불법 콘텐츠를 차단·근절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불법무기 유통·제조 단속을 위해 위장수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
- 부적격자가 총포를 소지할 수 없도록 총포소지허가증 발급 갱신 기준을 강화할 것

- 오송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
-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금지가 아닌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요에 비해 경찰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할 것
-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근거로 적용된 신원보증서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
- 스마트워치 고도화 R&D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것
- 경찰발전위원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연령·성별 편중을 막아 지역 내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원은 여전히 치안정책과 관련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출생 미신고아동 9,003명(2010~2014년 신생아)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것
-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인 경찰권 분산이 사실상 체감되지 않으므로 지자체 권한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경찰관 대상 정기 마약검사를 도입할 것
- 명예퇴직 예산 부족분은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수



당 등을 조정하여 명예퇴직 신청자를 먼저 구제할 것

- 온라인 중고거래 및 게임 아이템 사기 등 사이버 사기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장 위험직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자 안식월제 도입 필요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확한 신상정보는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주지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누락·지연된 경우가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농촌지역 치안센터 폐지 정책을 재검토할 것
-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할 것
-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이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이후 전국 시도청으로 이송되었는바, 전국 통합수사를 검토할 것

## 6. 소방청

-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청주 서부소방서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이 허위보고로 보고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

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시·도 소방본부 조직의 원활하게 운영을 위하여 부분부장, 부장 등 중간 간부 직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소방관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소방활동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진로 확보를 위한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 보완을 추진할 것
- 수해 대처에 필요한 양수기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할 것
- 소방인력 배치와 예산 계획 시 지방의 비중을 제고하고, 열악한 오지 등 지방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 인건비 및 장비구매 비용의 국가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화재진압·재난대응 중 소방관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보상이 확실히 조치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 신규 소방헬기 도입 대책 및 노후 수입헬기 부품 비축 등 노후 헬기의 원활한 수리·정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현장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대상 홍보 강화 등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구조 분야 경력요건 전수조사 결과 경력미달로 추정되는 재확인 대상자 관련 문제는 해당 소방관뿐만 아니라 당시 소방본부의 책임도 고려하여 상호 간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산림화재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계획을 보완할 것
- 코로나19 상황 이후 실시 실적이 크게 감소한 화재안전조사를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위험물질 화재진압과 수재 대응에 효과적인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및 산불진화에 효과적인 산불전문진화차량의 추가도입계획을 마련할 것
-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일원화하고 소방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한 「소방조직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등 관계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영화관에 사용되는 흡음제 등 실내장식물 물질 인정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
- 구조활동 시 활용되는 인명탐색 개인안전보호 장비인 라이트라인의 결함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오송 지하철도 참사 시 경찰에 제대로 통보가 안 되어 교통통제가 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119코드 분류체계 및 유관기관 통보 시스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방관이 착용하는 웨어러블캠 및 바디캠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동형영상정보처리장치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조방지장치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구급대 업무부하 과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급인력 충원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인상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대원의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설치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 응급환자 수용거부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병원의 경우 고발하는 등 협조와 강경 대책이 효과적으로 병행되도록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소방헬기 조종사 전문화를 위한 소방헬기 모의비행훈련장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사업에 관한 KT와의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하여, 소방청 직원의 특정업체 장비 납품 지시, 뇌물 요구 및 비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의 수난구조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수난 구조 개선을 위한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19구조건이 적절히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수의사 배치 등 119구조건 보호·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구급차 유료화 추진, 환자의 지정병원 요구문제 개선 등 구급차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응급상황 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시·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심신수련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긴급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말기 보급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 이태원 참사 당일 소방청장과 소방청 간부들의 음주 사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속 직원의 근무지 이탈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소방활동에 활용되고 있는 중국산 드론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으므로 소방 드론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구급차 교통사고 관련 보험료의 전국통합보험 추진계획을 조속히 진행할 것
- 중형구급차 보급률이 매우 낮으므로 구급활동 역량 향상을 위해 중형

구급차 보급 확대계획을 마련할 것

- 소방공무원 등 현장 위험직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안식월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제연설비의 시공단계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전문인력과 전문장비에 의한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연설비 점검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도 소방공무원 출동 간식비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인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색구조 지침서를 참조하여 구조자·사망자 고유번호 부여, 수정절차 마련 등 대형참사 시 체계적인 신원확인제도 확립 방안을 마련할 것

## 7. 지방자치단체

### 가. 서울특별시

- 특정 시민단체가 공공급식 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는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서울특별시 차원의 면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서울특별시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

- 세운상가군 및 주변지역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특별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라는 모토에 걸맞게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 등을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
- 무단휴업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단지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홍제동 소방관길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
- 임대주택 매입 시 적정 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교통유발부담금 및 감면프로그램을 실생활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이상동기범죄 등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경건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재난 업무와 관련해서는 수평적 기관 간의 통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보유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 집중호우에 대비하도록 침수취약지도를 제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
- 잠실돔구장 및 그에 따른 대체구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철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자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해치TV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소아응급의료체계가 권역별로 정비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에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은평새길 추진 시 서울특별시가 이해 관계 등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
-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과 관련한 감독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지역사랑상품권 집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를 마련할 것
- 모아타운사업의 미진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도권매립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월-여의 지하차도 통행료 인상 및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울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강서구의 고도 제한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 침수방지시설 설치, 주거 상향대책 등에 대한 진전된 대책을 마련할 것
-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과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SH공사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시스템을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철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강리버버스 도입은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실있게 추진할 것
- 마포구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이어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동행카드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하여 의료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무임승차 비용 적자 관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
- 서울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문화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서울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지하차도사업 추진 계획 시 각 도로 등의 수변과의 거리, 위치, 지대, 통행차량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설계빈도에 반영할 것
- 저류시설이 다수가 상주하는 대형 복합건물, 공동주택단지 등을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서울특별시 내 부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
- 악의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을 들

러싸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GTX-D 노선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인천-신림선, 난곡선 경전철 연장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 한파나 대설 관련 문제로 인해 취약계층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액으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지하철 상가 공실률 증가에 대해 상권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해 노력할 것

○ 여성관리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

○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 강북 동북권에 추진된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TBS 지원액 삭감 등의 문제는 서울특별시민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 창문형 차수판이나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
-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대비정책을 대비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노키즈존을 줄이기 위한 조정책들과 계도책을 마련할 것
- 노키즈존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 시행을 적극 검토할 것
- 어린이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는 정책보험 실시를 적극 검토할 것
- 서울키즈오케이존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어린이안전사고 예방매뉴얼을 보급하고 사고 방지용품 구비를 지원할 것
-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정책 변화에 의해서 지방세수의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의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것
-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화재안전대책을 정비하고 소방재난본부의 인력, 예산, 행정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경기도민과 인천광역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마을버스 개선 및 버스정류장 내 버스노선도 정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청년안심주택에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성소수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 나. 대구광역시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할 것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화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 차원의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민들의 재난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재난예비비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돌봄 정책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
- ‘두류젊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다. 인천광역시

-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무료화)할 것
- 정당 현수막 관련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제출할 것
- 인천광역시 신청사 매입 과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할 것
- 전세 사기 피해 관련
  -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실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
- 특정 시민단체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 기존 감사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시 조치할 것
- 초고층 건축물이 밀집된 송도국제도시의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특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헌 판결과 관련하여, 조례 폐지 등의 의견이 있으므로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할 것
-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마을 주민들의 주변 환경 유해시설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 연수구의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근무자 투신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 방

지를 위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라. 경기도

- 감사관실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고속도로 등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도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전협의 기본방향 의결과 같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기초지자체의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
-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가입을 거부할 경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 내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대응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할 것
- 360도 돌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및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협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

- 마약류 처분 관리 미흡 문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측근 자녀가 성남산업진흥원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재조사할 것
-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내 유기견 관리업무에 공무원을 동원하지 말 것
- 경기북부·남부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앞 보행로 없는 도로의 안전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후도시 조성 및 인력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가 행안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
-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높은 재정 결손이 예상되므로, 도지사가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만이라도 국세 감소율 그대로 결산 감액을 하지 않고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할 것
- 도지사가 성장률 저하 및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정부에 개진할 것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인고속도로 터널과 유사한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대책



을 마련할 것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복지하라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 2022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세 체납액 1위를 차지하였으므로, 활용 가능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엄정하게 추심할 것
-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 및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마. 충청남도**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위원장 체제를 단독 책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지방 공공기관을 적정 규모로 통폐합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기관장

인사 등을 운영할 것

-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공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
- 천안의료원의 어린이병원 기능 특화, 공주의료원의 노인질환 기능 특화, 홍성의료원의 산부인과 진료 특화 등이 도지사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할 것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충남 7개 시·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충남 지역 산업폐수 불법 배출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충남 지역 지하차도 54개소에 호우시 진입 차단시설, CCTV 등 안전시설의 보강을 추진할 것
- 충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 간 단체 협약 중 불법 또는 무효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개선되도록 할 것
- 충남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를 현행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충남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바. 전라북도**

- 군산형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에디슨모터스에 대한 무담보 대출 및 빚 보증에 따른 전라북도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감사 등을 실시할

것

-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의 지원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 프로축구 구단 전북현대모터스 외 도내 다른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 전라북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점검 등을 실시할 것
- 정기점검, 실태조사, 표지판 설치 확대 등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 평균시간, 소방관 1인당 담당면적, 소방장비 현황 등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소방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실한 편이므로 소방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 재정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전주시 빌라 생활고 사망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할 것

-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주민의 안전 및 범죄 등 우려가 있는 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라북도의 결식아동 급식비(8천원)를 현실적인 외식비 수준에 맞추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도내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이송수단보급, 교통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사. 강원특별자치도**

- 수산물 방사능검사 관련 장비구입비 확보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19년, 2020년, 2023년 산불로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더 편안한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하여 자치권이 많이 미흡하므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불진화헬기 운용 등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경상남도와의 공동으로 대형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는 1인가구 및 고령인구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사태 다발 지역이 많고 호우피해도 취약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8. 공공기관

### 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관련 교육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실질적 품질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생애 전반의 행정기관 책무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

###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점검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할 것

###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미정리사료 등록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 비율 개선이 미진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 업무 위탁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할 것
- (가칭)‘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추진할 것

###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중단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마. 공무원연금공단**

- 개포 공무원 임대주택은 타 지역 공무원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보증금이 높은 수준인 바, 향후 주변 단지의 전·월세 시세 변동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임대보증금을 설정하도록 운영·관리할 것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심사 및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바. 도로교통공단**

- 콜센터 상담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처우를 개선할 것
- TBN 방송사장 심사 기준을 정비할 것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마약 전과자를 포함하도록 경찰청과 논의할 것

####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9.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가. 서울경찰청

- 전광훈 목사의 역사왜곡 발언 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
- 전장연 집회 관련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 등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전담팀 운영과 같이 강력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시청역 앞에서 진행되는 평화로운 종교집회(월요시국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규모가 커지며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처리 및 HUG 보증 등 가짜 계약서 관련 홍보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YTN 직원에 대해 과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MBC 前 사장에 대한 횡령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바, 신속히 수사할 것
-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유튜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경찰 내부 갑질 사건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

-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지구대·파출소 요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
- 시민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체포 남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울 관내 파출소 중 6곳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는바, 치안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 관련 위험성이 증가함에도 가해자 구속률이 낮은바, 학교전담경찰관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공무집행방해사범 및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일부는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바, 주취폭력과 전쟁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이 1인 시위를 마친 시민단체 대표의 뒤를 따라가는 등 개인사찰 의혹이 있는바,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묻지마 범죄 발생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휘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택시기사 분신 사망 관련 업체와 유족을 대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

는 등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민원을 제기한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해 과잉·불법 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바,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선거 관련 인터넷 언론매체의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정한 단속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행 시간대별 탄력적 단속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처할 것
- 지하철 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리미제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구체적인 인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대사관에 항의 서한문 전달 시 경찰이 제지하였는데바,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지 검토할 것
- 김어준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공정한 수사였는지 의문인바, 허위 사실 유포사건 등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이태원 유가족 집회 시 물품 확인 등 조치가 과잉대응이 아니었는지 확인할 것
- 개인정보 유출 관련 MBC 기자 사건 등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수사할

것

- 의료용 마약 관련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직전 발생한 폭력·손괴 등 피해에 대해 체크리스트에서 ‘낮음’ 단계로 평가했는데, 적극적인 법 해석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나. 대구경찰청

- 대구시는 사업용차량 사고다발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4위에 해당하는바, 사업용차량 사고다발지역 개선을 위한 도로체계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
- 경장, 순경 현원이 정원대비 현저히 부족한바, 하위계급의 업무가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 후 현재까지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바, 신속히 수사하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수사준칙 상 피의자 미출석 조사 종결(우편·전자우편·전화 등) 규정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교통안전 위협 및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이륜차 폭주행위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바, 지자체장과 협

의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균형 잡힌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는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
- 전년 대비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각종 비위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퀴어축제 관련 대구시장의 집회 방해 혐의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도록 노력할 것
- '24. 1. 1. 경북 군위경찰서의 대구경찰청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자율방범대는 가장 중요한 치안 보조 단체임에도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인바, 자율방범대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 **다. 인천경찰청**

- 인천부평경찰서 신축공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구간에서 이동식 과속단속장비 오단속 건에 대해 환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

- 조직개편에 따라 외사 기능이 폐지되는바, 인천은 외국인 거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국제기구도 있는 등 중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송도경찰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스토킹 접수 건 대비 안전조치 비율이 낮은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여청계 인력 보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바, 경찰이 적극 개입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 국토교통부 관계기관 합동 항공보안 특별점검시 인천공항에서 모의테스트 폭발물 2개가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데, 인천공항에서 경찰의 대테러 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집회·시위 개최 시 대화경찰관을 적극 활용할 것
- 총경 정년퇴직 시 시·도경찰청 과장급이 아니라 기관장인 경찰서장으로 공직을 마칠 수 있도록 인사주기 조정 등을 본청에 건의할 것
-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 시 국토교통부 행정정보를 참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

- 학교 내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수가 증가하면서 SPO 1 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도 전국 평균을 넘는 실정인바, SPO 인력증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인천강화경찰서 독신자 숙소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신축을 추진할 것
- MBI 금융투자 사기 사건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분리 수사 중인바, 신속히 기초수사를 마친 뒤 한 곳에서 통합 수사되도록 할 것
- 행정규칙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정비할 것
- 섬 지역의 지역관서는 노후화가 심하고 순찰차도 없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아동학대 신고 건수, 검거율을 토대로 보면 APO를 확대 운영해야 함에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은 객관적 치안 데이터는 안전한 편이나 체감안전도 순위가 매년 최저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다량 검출되고 ‘나비약’이 청소년 사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바,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 인천강화경찰서 가정폭력 뇌사사건(일명 ‘테니스남’ 사건) 관련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
- 초등학교 인근 공사현장 화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면제에 대한 관리

를 철저히 할 것

- 초등학교 인접 도로의 보도와 차도의 분리 등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관심을 기울일 것
- 최근 신종수법의 신생아 매매 사건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라. 경기남부경찰청**

- 전세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하려면 수사관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사건 배당을 줄이고, 사건처리 시 혜택을 주는 등 격려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을 것
-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MZ 조폭들에 의한 피해 우려가 크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파출소 등 주민들과 밀착하여 지역을 챙기는 경찰활동이 범죄예방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치경찰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조직, 인력, 권한 등의 분리가 필요하므로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세사기 수사는 사기의 고의성이나 의도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수사할 것

- 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자율방범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협력을 통해 치안 관련 문제를 해소할 것
-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청장부터 스스로 연구·노력하여 자질을 갖추고, 서장 등도 수사지휘역량을 갖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
- 경기남부지역의 어린이 교통안전 지표가 좋지 않고 통학로 주변 공사 문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
-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교통단속 장비 불비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문제가 많은 곳은 관할 서장과 함께 현장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을 찾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
- 수원역 디스코팡팡 사건 관련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을 구매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
-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력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것
-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예방하고 추적·검거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여 대응할 것
- 번화가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파출소를 두고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할 것



- 경기도 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한 직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대응할 것
-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담당하는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SPO 인력 증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경기남부의 재산몰수 실적이 미비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재산 몰수에 중점을 두고 수사할 것
- 북한발 사이버 공격 관련 용역업체를 통해 직원들의 연락처가 외부 유출되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속히 수사할 것
- 경기도의 넓은 관할면적과 증가하는 인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가 치안센터를 활용하고 상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지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 음주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감치명령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감치명령 제도를 철저히 활용할 것

-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이 가능해야 하는바,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검찰 수사사례를 참조하여 수사할 것
- 경기남부청 지하철 경찰대의 근무 인원이 적어 지하철역 치안에 대해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본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마. 경기북부경찰청**

- 수사지휘 역량 등 강화를 위해 지휘부가 관심을 가질 것
- 인터넷이나 가짜뉴스, 괴담에 대해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경기북부청의 인력 감축 규모가 타 경찰청에 비해 크므로 조정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당근마켓-네이버 직거래 사기 방지 협업(경기남부경찰청 시행 중)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SPO 인력증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 전세사기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재산몰수를 위해 노력할 것

- 경찰청에서는 치안센터 폐지 기조에 있으나 경기도는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바, 지역특성을 고려해 치안센터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바. 충청남도경찰청**

-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촉법소년의 마약 접촉이 증가하고 있는바,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쇼핑물 구매 관련 신종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할 것
- 매년 천안지역 폭주족이 시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할 것
- 충남의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지난 3년간 충남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
- 과학수사과와 형사과가 통폐합되는바,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 주취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센터 상주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사. 전라북도경찰청**

- 전북은 노인 보행자 사고 사망율이 전국 2위에 해당하고, 고령화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북청 수사관에 대한 제척 등 피의자에 의한 수사관 교체 요구가 높은 편이므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전북청 영장기각률이 높은 편인바, 기본권보장 미흡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경찰 수사의 신뢰를 저하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높여 현장 근무자들이 응급입원 업무 외의 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경찰 업무상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발생이 우려됨에도 마음동행센터 근무자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인력증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스토킹처벌법」 처리결과 구속률이 저조한바, 온정적 대응이 아닌 구속수사 등 강력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
- 금융사기 및 전세사기 관련 서민과 청년층 보호를 위해 사기범죄에 적

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미납 공소시효 만료건수가 많은바, 미납금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2018년부터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요청 시 서류나 요건을 간소화하였는바, 불필요한 서류추가 요구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마약사범은 20~30대가 대부분인데, 전북은 60대가 38%를 차지하고 있는바, 마약사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경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아. 강원경찰청**

-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 강원도는 각종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바, 새로 창설된 경찰 특공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치안수요가 많은 번화가에 상시적으로 파출소를 운영하고 지역경찰에 대한 인사·승진 인센티브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112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관련 지구대·파출소 배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양군 플라이강원 공사 관련 군수가 위법하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마약 투약 경찰관 관련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
- 경찰관의 마약류 투여 등과 관련하여 경찰 스스로 기간을 두고 마약검사를 하는 등 경찰 차원의 제도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향후 있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보수집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할 것
- 강원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관련 울타리 무자격 시공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개최시 관련 경찰서장 등 지휘관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

**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차. 새마을운동중앙회**

## 카. 한국자유총연맹

- 정관에서 삭제한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다시 복구할 것

## VII. 증인 및 참고인 현황

### 1. 기관증인

#### 가. 기관증인 총괄

연번	대 상 기 관	기 관 장	증인 수(명)	비고
1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상 민	22	
2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사무총장 김 용 빈	12	
3	진 실 · 화 해 를 위 한 회 과 거 사 정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광 동	7	
4	인 사 혁 신 처	처 장 김 승 호	12	
5	경 찰 청	청 장 윤 희 근	30	
6	소 방 청	청 장 남 화 영	13	
7	서 울 특 별 시	시 장 오 세 훈	46	
8	대 구 광 역 시	시 장 홍 준 표	34	
9	인 천 광 역 시	시 장 유 정 복	40	
10	경 기 도	도 지 사 김 동 연	46	
11	충 청 남 도	도 지 사 김 태 흠	30	
12	전 라 북 도	도 지 사 김 관 영	26	
13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지 사 김 진 태	32	
1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 장 황 종 성	5	
15	한 국 승 강 기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이 용 표	5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 사 장 이 재 오	3	
17	일 제 강 제 동 원 피 해 자 지 원 재 단	이 사 장 심 규 선	3	
18	공 무 원 연 금 공 단	이 사 장 김 동 극	5	
19	도 로 교 통 공 단	이 사 장 이 주 민	5	
20	한 국 소 방 산 업 기 술 원	원 장 김 원 술 직무대리	3	
21	서 울 경 찰 청	청 장 김 광 호	12	



연번	대 상 기 관	기 관 장	증인 수(명)	비고
22	대 구 경 찰 청	청 장 김 수 영	19	
23	인 천 경 찰 청	청 장 이 영 상	22	
24	경 기 남 부 경 찰 청	청 장 홍 기 현	26	
25	경 기 북 부 경 찰 청	청 장 이 문 수	18	
26	충 청 남 도 경 찰 청	청 장 유 재 성	17	
27	전 라 북 도 경 찰 청	청장 최 원 석 직무대리	16	
28	강 원 경 찰 청	청 장 김 도 형	16	
29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 장 임 준 택	4	
30	새 마 을 운 동 중 앙 회	회 장 곽 대 훈	3	
31	한 국 자 유 총 연 맹	총 재 강 석 호	5	
합 계			537	

##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신동혁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9.20.	한국자유총연맹	10.10.	사무총장직 사임	
2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9.20.	경기도	10.17.	코로나19 확진	

## 2. 일반증인 · 참고인

### 가. 일반증인 · 참고인 총괄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출석요구 의결			불출석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행정안전부 (10.10.)	6인	-	6인	2인	-	2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13.)	-	1인	1인	-	-	-
경찰청 (10.12.)	1인	1인	2인	-	-	-
소방청 (10.13.)	1인	-	1인	-	-	-
서울경찰청 (10.16.)	2인	-	2인	-	-	-
대구경찰청 (10.23.)	2인	-	2인	-	-	-
인천경찰청 (10.19.)	2인	-	2인	-	-	-
경기남부경찰청 (10.17.)	2인	-	2인	-	-	-
경기북부경찰청 (10.17.)	2인	-	2인	-	-	-
충청남도경찰청 (10.23.)	2인	-	2인	-	-	-
전라북도경찰청 (10.24.)	2인	-	2인	-	-	-
강원경찰청 (10.24.)	2인	-	2인	-	-	-
행정안전부 (10.26.)	2인	-	2인	1인	-	1인
총 계	26인	2인	28인	3인	-	3인

※ 출석요구 철회 증인 : 행정안전부(10.10.) 1인

※ 출석요구 철회 참고인 : 경찰청(10.12.) 1인

## 나. 일반증인 · 참고인 출석 현황

### 【출석 증인】

연 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1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9.20.	행정안전부	10.10.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2	이범석	청주시장	9.20.	행정안전부	10.10.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3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9.26.	행정안전부	10.10.	전국재해구호협회 부실운영 관련	
4	김병섭	알바천국 대표	9.26.	경찰청	10.12.	채용사이트 범죄악용 관련	
5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	9.26.	소방청	10.13.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6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9.20.	서울경찰청	10.16.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7	김성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9.20.	서울경찰청	10.16.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8	설용숙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0.	대구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9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0.	대구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0	이병록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9.20.	인천경찰청	10.19.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1	반병욱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0.	인천경찰청	10.19.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2	김덕섭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장	9.20.	경기남부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3	김병화	경기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0.	경기남부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4	신현기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장	9.20.	경기북부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5	정용환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0.	경기북부 경찰청	10.17.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6	이종원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장	9.20.	충청남도 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7	이시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0.	충청남도 경찰청	10.23.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8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	9.20.	전라북도 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19	방춘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0.	전라북도 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신문요지	비고
20	조명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9.20.	강원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1	김종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9.20.	강원경찰청	10.24.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 관련	
22	이상래	前행복도시건설청장	10.10.	행정안전부	10.26.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 【출석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일자	진술요지	비고
1	신태승	오성시스템 대표	9.26.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10.13.	사전투표 운용장비 입찰 관련	

### 【불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출석요구 사유	대상기관	불출석 일자	불출석 사유	비고
1	이상래	前행복도시건설 청장	9.26.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	10.10.	출석요구서 송달 과정을 문제삼아 불응	
2	최순철	미호천제방공사 감리단장	9.26.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	10.10.	건강상의 이유	
			10.10.			10.26.		

## 다. 일반증인 · 참고인 철회 현황

### 【철회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 요구결 일자	대상 기관	출석 요구 일자	출석 요구 철회 일자	출석요구 사유	철회 사유
1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9.26.	행정안전부	10.10.	10.10.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여야 합의

### 【철회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 요구결 일자	대상 기관	출석 요구 일자	출석 요구 철회 일자	출석요구 사유	철회 사유
1	유영재	중원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9.26.	경찰청	10.12.	10.12.	이상동기범죄 관련	여야 합의